

동아시아와 제국주의

한미일 동맹 강화와 위험

8~9면

밀양 송전탑

정부·경찰이
진정한 '외부세력'

2면, 11면

공안 탄압

왜 마녀사냥에
반대해야 하는가

3~4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미국이
다폴트로 갈까

5면

복지 먹튀

진보의 대안
논쟁

6면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인쇄인: (주)아이에디 이승철
등록번호: 서울다08179 (격주2)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6499-2791
제보: 02-777-2791 E-Mail: 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Left21.com

제113호 | 2013년 10월 14일 ~ 10월 27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리프트21

끝없는 마녀사냥,
밀양주민 짓밟기,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
복지 먹튀와 민영화 추진

'외부·종북 세력' 이 아니라 친박우파가 문제다

▶ 관련 기사 2, 3, 6, 7, 16 면

리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일까요?

“기사 영터리로 쓰며 나한테 두드려 맞는다. … 나와 관련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놈은 인간쓰레기야 … [그 놈과] 가까이 하면 내가 기사 안 준다.”

새누리당 김무성의 녹취록 중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4대강 자전거길을 달리며 엄청난느 이명박

“[서청원은] 마지막 남은 낭만주의 정치인”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김재원, 설마 비리가 낭만?

“김일성의 교시 중 하나는 대한민국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을 지원해라 였다. 그 지원을 받은 인물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격을 했을까?”

새누리당 김조테, 잇따른 사법부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자

“[전작권 환수 주장은] 적화통일의 사전 정지작업”

외교부 국장 이원우

“[밀양의 시위용 목줄은] 적화통일 혁명 광장의 단두대”

〈TV조선〉진행자 김광일

“우리 사회는 이석기 의원의 종북좌파 활동에 대한 우려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파업 노조원을 ‘종북으로 몰며

“내 국적은 일본”

‘건국의 아버지’라던 이승만의 미국 체류시절 자필 국적 표기

“65살 때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인생을 잘못 사신 것”

상위 30퍼센트만 제대로 살았다는 전 국민연금추계위원장

“서울중앙지법 판사들 중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좌편향 내지 종북 판사들이 많다고 한다.”

노원구청장을 ‘종북’이라 주장했다 패소한 전 방송인 정미홍

우리 모두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거짓·폭력을 통한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하라

지금 밀양에서 박근혜 정부는 눈뜨고 지켜보기 어려운 극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짓밟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 대표와 활동가 들은 공사장 한 곳에 간신히 진입해 찬 바다에 비닐을 깔고 노숙 농성을 벌이며 공사를 저지하고 있다. 또한 밀양, 서울의 대한문 앞, 한전 본사 앞 등 곳곳에서 농성과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3천 명, 한전 직원 1천 명, 밀양시청 직원 1백50명은 농성장을 포위하고, 쓰러진 주민들의 허리를 밟고, 술 취한 상태에서 70세 주민에 시비 걸어 연행하는 등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 때문에 고령의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다치고 실신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공사 개시 후 열흘간 30여 명이 쓰러졌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한전은 “내년 여름철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해야 하므로 송전탑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전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밀양 송전탑 없이도 신고리 3호 전력의 송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또한 한전은 전문가협의체의 검토 결과 송전탑 말고는 대안이 없고, 자신들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고도 말한다.

이는 모조리 거짓말이다. 전문가협의체는 전문가 위원 중 3명이 한전 측 자료를 그대로 받아 ‘복사, 붙여넣기’ 한 것으로 드러나 파행으로 치달았고 그 보고서 는 국회에서 채택도 안 됐다.

또한 대화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은 지난 8년간 대화와 소통을 요구하며 싸우다가 다치고 연행된 수없이 많은 주민과 활동가 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부도 마찬가지다. 밀양에 파견된 국가인권위 조사단은 밀양의 끔찍한 실상을 보고서도 “인권 침해가 더는 없다” 하고 발표했다.

국가인권위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 송전탑이 지나는 지역의 암 발병 위험도가 명백히 높다는 증거들을 발견하고서도 은폐했다. 밀양에 지을 송전탑은 다른 지역보다 전압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위험도 더 클 것이다.

국회도 장단을 맞추고 있다. 공사 강행 직후, 새누리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공사 강행을 보상으로 용인하려는 법안을 밀어붙였다. 이 법안은 밀양 뿐 아니라 제2, 제3의 밀양을 촉발할 것이다. 궤퇴죄한 민주당은 이번에도 반대 표결조차 하지 않았다. 활동가들은 이 법



조원 이진기

정부·경찰·한전이아말로 주민의 목숨과 건강을 위협하는 ‘외부세력’이다. 구덩이를 파고 쇠사슬로 서로를 엮고 있는 주민들.

이 “밀양 주민 탄압법”이라고 규탄했다. 신고리 3, 4호기는 올해 6월 핵심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내년 8월 가동을 강행하려 한다. 또한 낡은 핵발전소를 폐기하면 밀양 송전탑이 필요없다. 한국은 일본

강병준

‘종북·외부 세력’ 운운하며 갈라 치려는 역겨운 자들

정부와 한전, 보수 언론은 지금 ‘종북 세력, 외부 세력’ 때문에 송전탑 문제가 꼬이고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송전선이 관통할 지역 주민 3분의 2(2천 2백여 명)가 반대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밀양 시장(새누리당 소속)과 진주의료원 폐쇄 주범 홍준표가 앞장서 이런 역겨운 선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발맞춰 활동가들을 집중적으로 연행, 구속하고 있다.

나이가 <조선일보>는 ‘통합진보당이 구덩이를 파서 목줄까지 걸고 주민들을 과격 투쟁으로 몰았다’는 역겨운 거짓말까지 퍼뜨렸다.

통합진보당 마녀사냥과 연결 지어 이간질을 하며 저항을 짓밟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구덩이와 목줄은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의지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었다. 연대하러 온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무지막지한 폭력에 떠밀려 이런 처지까지 몰린 할머니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현재 대책위는 “주민들과 연대하는 이들은 오늘날 소중한 우리 사회의 양심세력”이라며 더 많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국가의 횡포에 함께 맞서 연대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금지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연대를 차단하고 운동을 분열·위축시키려는 정권과 보수언론에 맞서 지지와 연대의 힘을 모아야 한다.

강병준

▶ 관련기사 11면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대안은 있다

박근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핵발전소를 지금보다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의 계획보다는 줄어든다고 생색낼 듯하지만 말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핵발전 설비가 1.5배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한전은 이런 밑그림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송전탑 3천6백21개를 세울 예정이다. 제 2, 제 3의 밀양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밀양 송전탑 사태를 불러온 신고리 3·4호기는 전체 전력 생산의 1.6퍼센트 수준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올해 여름 ‘월전 비리’ 때문에 핵발전소 107기가 멈췄는데도 대규모 정전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핵발전이 아닌 대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심지어 핵발전은 비싸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 핵 발전소 폐쇄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핵발전예 필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이미 2011년 ‘탈핵’을 선언한 독일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도입해 핵발전소를 대체하고 있다.

그린피스 한국 지부가 발표한 ‘에너지 혁명’ 보고서는 2030년까지 한국에서 핵발전소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보여 줬다. 이를 뒷받침하는 보고서도 여럿 발표된 바 있다.

매년 GDP의 2퍼센트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10년 안에 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가장 좋기로는 전력을 소비지 부근에서 ‘지역분산형’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면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전력 손실도 막을뿐더러 무엇보다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물론 현재 도시에 사람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에는 여러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터전을 보전하면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된다면 지금과 같은 비극은 훨씬 줄어든 것이다.

핵무장과 연결돼 있고 이윤만을 우선한 비싸고, 비효율적이고, 비리의 온상인 핵발전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양효영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 (다음호 가판은 10월 28일)	
서울 건대입구역 4번 출구	19:00~20:00
울산 현대차 4공장 구 정문 건너편	14:30~15:30
격주 화요일 (다음호 가판은 10월 29일)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19:00~20:00
서울 혜화역 4번 출구	19:00~20:00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19:00~20:00
수원역 롯데리아 앞 광장	19:00~20:00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나편(오아시스빌딩)	19:30~20:30
격주 수요일 (다음호 가판은 10월 30일)	
서울대병원 후문(혜화역 3번 출구)	8:00~9:00
격주 목요일 (다음호 가판은 10월 31일)	
울산 성남동 젊음의 거리 중부소방서 옆	19:00~20:00
대학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28~30일)	
건국대(서울) 학생회관 앞	월요일 12:00~13:00
부산대(부산) 정문 앞	월요일 11:50~12:50
원광대 학생회관 로비	월요일 11:30~12:30
고려대(안암) 정경대 후문	화요일 16:30~17:30
이화여대 포스코관 지하1층 입구	화요일 14:30~15:30
인천대 학생회관 입구	화요일 12:30~13:30
국민대 법학관 1층 식당 앞	수요일 12:00~13:00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서울 : 그날이 오면(서울대 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질(성균관대 앞), 이름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응암동), 역사전문서점 물음(반동사거리)	
울산 :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노엄 촘스키 등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 57명

“한국에서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

박노자, 브루스 커밍스 등 한국학 연구자 2백6명(10월 10일 현재)이 국정원의 마녀사냥에 반대하며 성명을 발표(본지 112호 참고)한 데 이어 노엄 촘스키 등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 57명도 국정원의 마녀사냥을 규탄하고 나섰다.

촘스키 등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이 정치권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몰아내려고 마녀사냥을 시작했다”며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공격당하고 있다”

고 걱정했다.

또한, “한국 민중은 어렵게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매카시즘적 전술을 구사하며 이 성과를 되돌리려 한다”며 마녀사냥에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은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대책위 웹사이트(<http://gongjak.org>)에서 볼 수 있다.

차승일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전교조 사수 전조위원 상경 투쟁 10월 19일(토) 오후 1시 / 장소 추후 공지 주최 : 전교조	철도 민영화 저지 3차 범국민대회 10월 26일(토) 오후 3시 / 서울역 주최 : KTX민영화저지범국민/민영화반대공동행동/철도노조
민주파괴! 국정원해체! 공약파기!! 박근혜 정권 심판 민주찾기 대행진 10월 19일(토) 오후 4시30분 / 서울역 주최 : 국정원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	노동탄압분쇄 민주주의 파괴 저지 민영화-연금개혁 저지! 공공부문-비정규직 노동기준권 쟁취!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10월 26일(토) 오후 4시30분 / 서울역 주최 : 민주노총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범국민 집중 촛불집회 10월 19일(토) 저녁 7시 / 서울 시청 광장 주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국정원 선거 개입, 공약파기, 노동탄압 규탄 범국민 촛불 집회 10월 26일(토) 저녁 7시 / 장소 추후 공지 주최 :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박근혜 정부 공약파기 규탄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노동조건 개선저지를 위한 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 10월 26일(토) 오후 2시 / 청계광장 주최 : 전국공무원노조	

박근혜의 ‘유신 스타일’ 뒤에 도사린 모순

김문성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마녀사냥 이후에도 박근혜의 공세는 채동욱 찍어 내기, 전교조 법외노조화, 각종 복지 공약 파기,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NLL 대화록 공세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NLL 대화록 ‘사조 실종’ 공격에 앞장선 것은 검찰이었다. 채동욱을 찍어낸 효과가 금방 나타난 것이다.

최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이는 8월 초를 떠오르게 한다.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노동자 증세’를 발표한 직후 지지율이 급락했는데, 이번에도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한 여파다.

그런데 박근혜는 여전히 더 많은 공약 뒤집기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반감이 정치적 급진화로 발전할 수 없도록 마녀사냥을 벌일 필요는 여전히 있다.

이를 통해서 전통적인 지배이념인 ‘안보’와 ‘성장’을 되살리고 우파 지지층을 묶어두려는 것이다.

그러나 ‘유신스타일’은 살려도, ‘유신체제’를 살릴 수는 없는 박근혜에게는 국회와 그 안에서 새누리당의 구실이 여전히 중요하다.

무리수를 두면서 비리정치인의 대명사인 친박 서청원을 국회로 복귀시키려는 것은 새누리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포석일 것이다. 그런데 곰팡이 피고 악취나는 인물들에 의존해 친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도 박근혜의 모순이다.

문제는 정치적 반대파들이 박근혜의 약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장외에 나왔던 민주당은 NLL 공세와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에 굴복해, 백기투항하듯이 국회로 복귀해 버렸다.

이러니 박근혜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은 좀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공백을 파고들어야 마땅한 진보정당들은 분열과

우경화 때문에 좀처럼 존재감을 회복하지 못 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운동은 마녀사냥의 타격 속에 정체해 왔다. 운동의 지도자들이 민주당에 의존하고 정쟁 확대를 주저하면서 이미 기회를 놓친 면도 있다.

물론 우리는 이 운동이 이미 박근혜의 정통성에 흠집을 내고, 정권 내부에 균열을 일으키는 정치적 성과를 남겼다는 점도 봐야 한다.

다행히 최근 복지 후퇴, 전교조 탄압, 민영화 등을 놓고 공동 대응을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월 1일엔 이런 다양한 의제의 연대체들이 모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런 흐름을 10월 26일 대규모 공동 집회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투쟁들을 정기국회 기간에 민주당에 힘을 실어 주는 용도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대중투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투쟁체 건설로 나갈 필요도 있다.



낙관도 비관도 아닌 강력한 보수대연합은 박근혜의 강점이지만, 그럴수록 부패한 자들을 앞세워 사람들을 들들 볶아야 하는 건 모순이다.

채동욱은 찍어내고 부패 서청원은 밀어주고

박근혜는 ‘카더라’ 수준의 의혹을 빌미로 검찰총장 채동욱을 찍어냈다. ‘도덕성이 훼손됐다’는 거였는데, 진정한 이유는 채동욱이 추진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가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와 측근들이야말로 도덕성 파탄자들이다.

채동욱 찍어내기에 앞장섰던 법무장관 황교안은 삼성에서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뽕값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이 10·30 재보선 경기 화성갑 후보로 공천한 서청원은 비리로

두 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았던 자다. 또 이 정부는 최근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용산참사 살인범 김석기를 낙하산 임명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병역 면제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드러났다.

여기에는 박근혜가 직접 발탁했다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유민봉을 포함해 국무총리실 대변인 등이 들어가 있다.

이토록 위선적인 자들이 ‘애국’과 법질서를 외치는 것은 구역질나는 일이다.

거짓과 억지 드러나는 NLL 마녀사냥

마녀사냥의 불똥이 자신들에게까지 뿔까 봐어서인지 청와대 안보실장 김장수와 국방부가 최근 ‘노무현의 NLL 포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박근혜와 새누리당, 국정원과 조중동 등은 그동안 잊지도 않은 일로 친노정치인 등을 마녀사냥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다시 검찰이 대화록 ‘실종’이니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대화록의 음원과 기록물이 다 있는데 뭐가 실종이란 말인가.

오히려 이로써 NLL 대화록이 마녀사냥용 무기였다는 것만 드러난 셈이다. 권영세가 “비상계획”이라고 말한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용된 것이다.

사실 NLL은 영토선(해양경계선)도 아니다. 미국 국무부조차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우파는 NLL이 영토선이라며 호전적 정책을 펼쳐왔고, 이에 북한이 맞대응하면서 서해는 죄 없는 젊은이들의 무덤이 됐다.

따라서 NLL 대화록에 관한 진보의 대답은, 바다 위에 선을 긋고 전쟁과 무고한 희생을 부추기지 말라는 것이 돼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비판받을 게 있다면 오히려 우파에 굴복한 것에서 찾아야 한다.

민주당이 “NLL을 초당적으로 앞장서서 지키겠다”고 나선 것도 국정원의 국면전환용 물타기에 힘을 싣는 결과만 낳아 왔다.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보수 언론, 우익단체들도 ‘이 때다’ 하고 한 목소리로 ‘통합진보당 해체’를 외쳐 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에 제명안을 올렸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을 승계하는 다음 진보당 비례대표도 “북한에 가서 간첩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정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이 해산된 이후 소속 의원의 의원직 박탈, 피선거권 제한, 그동안 지급된 정당보조금 전부 환수 법안까지 줄줄이 내놓고 있다.

진보당 해산을 추진하는 정부와 우파는 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을 문제 삼고 있다. 진보당이 말하는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사회’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가 “헌법에서 보호할 수 없는 것”이고,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동조”라는 것이다. 이들은 ‘방어적(전투적) 민주주의’를 들먹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진보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누가 진정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가. 온갖 불법과 부패, 비리의 몸통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사실 이들이야말로 5·16쿠데타와 광주항쟁을 짓밟는 ‘내란’으로 권력을 잡은 정권의 후예들이다.



이것이 ‘종북’인가?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주민들과 연대한 통합진보당 당원들.

‘국정원 게이트’야말로 이들이 박근혜 당선을 위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건 아닌가. 지금도 ‘종북 마녀사냥’ 속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상·표현의 자유를 난도질하고 있다.

게다가 진보당의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주장은 완전히 정당하다. 미국의 패권을 위해 이 지역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한미군·한미동

맹에 반대하는 것은 평화와 민주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저들이 진보당을 해산하려는 진정한 이유는, <조선일보>의 말대로, “[진보당]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부터 용산 철거민 참사, 쌍용자동차·한진중공업 해고자 복직 시위는 물론 FTA 폐기 시위,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촛불 시위 등에 거의 빠짐없이 참가해 왔”기 때문이다. 저들은 대중적 노동운동에 뿌리를 둔 진보당을 ‘종북’으로 낙인 찍고 불법화함으로써 운동을 이간질하고, 투쟁을 잠재우고, 사회를 더 우경화하려고 한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의 노선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함께 이런 시도를 막아야 한다.

성지현

마녀사냥의 앞잡이로 나선 언론들

기성언론은 마녀사냥의 광기를 부추겨 온 일등 공신이다. 특히 조중동과 종편 같은 보수 언론들은 ‘종북 물이’의 앞잡이 노릇을 해 왔다.

10월 9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통진당 RO의 제조법으로 만든 폭탄, 살상반경 30m”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국정원·검찰이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폭탄제조법’을 사실로 전제하고 ‘아님 말고’식으로 보도해 버린 것이다.

<중앙일보>는 “RO가 노렸던 평택기지에 울타리가 뜯겨 있고 경비원이 자고 있었다”며 위기감을 부추겼다. <월간조선> 10월호에서는 RO와 같은 ‘종북’ 테러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북한 고강도 도발 예상 시나리오”라는 황당한 소설 같은 전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실었다.

이 같은 황당무계한 ‘부풀리기’는 매카시즘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총기”, “살상”, “테러”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켜 공포심을 자극함으로써 이성적 판단을 파묻어 버리는 것이다.

국정원과 언론이 녹취록 출처를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국정원은 “언론에 알려진 녹취록에 따르면” 하면서 피의자를 신문하는데, 언론도 “국정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하면서 보도한 것이다. 애초부터 ‘정확한 사실 관계’는 안

중에 없었다는 뜻이고,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증거해주면서 공모의 흔적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기자협회는 확인되지 않은 녹취록 전문을 지면에 실어 고소당한 <한국일보>의 보도를 ‘8월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독사의 헛바닥

이 같은 보수 언론의 악의적 공격은 통합진보당을 넘어 전체 운동을 향해서도 뻗치고 있다.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처절하게 싸우는 밀양 주민들의 투쟁을 ‘종북’ 세력의 수상한 음모쯤으로 매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조선일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정치검찰 규탄 등 진보 운동의 대표적 의제들을 다루는 통합진보당 논평을 두고 “4일에 1번 꼴로 친북 논평”이라며 비난했고, 서울시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등에 지원금을 준 것을 두고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기도 했다.

<주간조선>은 “안철수, 이석기의 우연한 인연?”이라는 기사에서 “입주 시기가 맞아어도 두 의원은 이웃사촌이 될 뻔했다”며 억지를 부렸다.

마녀사냥과 선정적 보도에 눈이 먼 보수 언론들은 우리를 혼란에 빠트리며 더러운 권력을 감싸주고 있다.

김승주

방어적(전투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민주적 권리를 억압할 수 있다는 법 이론. 사실상 공격적 자본주의 체제 수호 이론. 국가보안법·테러방지법 옹호론자들의 무기.

운동 속의 논쟁

왜 마녀사냥에서 통합진보당을 방어해야 하는가

검찰과 국정원은 여전히 '내란음모' 사건에 별다른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부풀리기와 왜곡을 통한 공안탄압은 멈추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통합진보당 해산 추진도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 '내란음모정지공작' 공안탄압대책위에 노동당, 정의당이 참가하지 않는 등 진보진영은 여전히 마녀사냥에 맞선 투쟁으로 힘을 충분히 모으지 못하고 있다.

마녀사냥에 대한 방어에 소극적인 진보진영 내 일부는 자주파 활동가들의 사상을 문제 삼는다.

이석기 의원 등이 "북한 관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정의당 조승수 전 의원)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복지국가소사이터 허기표 정책위원은 노동당 기관지에서, 탄압받는 자주파 활동가들을 방어하는 게 "인생의 낭비"라고까지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 주민을 억압하는 북한의 지배계급과 북한을 모종의 대안으로 여기는 자주파 활동가들은 결코 같지가 않다.

북한 지배계급과 자주파

〈조선일보〉는 통합진보당을 '종북'이라고 비난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한미FTA 반대, 4대강 건설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것은 통합진보당 활동가들이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에 기반한 진보운동 내의 일부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사실, 많은 개혁주의자들은 남한 사회가 북한 사회보다 더 우월하다는 관점에서 북한 친화적 사상과 세력을 '시대착오'로 치부한다.

이런 태도는 2003년 송두율 교수 마녀사냥 때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재독학자인 송두율 교수는 양심적 지식인으로 37년 만에 고국을 찾았으나 국정원은 그의 친북적 성향을 문제 삼아 광기어린 마녀사냥을 벌였다.

송두율 교수가 북한 노동당 입당 사실을 인정하자 그를 조대했거나 옹호했던



국정원의 사냥감이 됐던 무고한 희생자 2003년 마녀사냥을 당한 송두율 교수.

자유주의자, 개혁주의자 들도 대부분 등을 돌렸다. 이들은 송두율 교수에게 공개 사죄와 '헌법 준수 약속'을 종용했다.

결국 송두율 교수는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살 것"이라며 준법 약속도 했다.

그러나 마녀사냥은 오히려 더 기세가 올라갔다.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2008년에 가서야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여론재판은 끝난 뒤였다. 송두율 사건은 남한 사회가 언제든 한

사람의 머릿속까지 뒤질 수 있는 비민주적 사회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사실 남한과 북한은 둘 다 억압과 착취에 기반한 체제다. 남한의 시장 자본주의가 북한의 국가 자본주의보다 자유로운 것은 남한 노동자·민중이 처절한 투쟁으로 얻은 성과 덕분이다.

송두율 교수에게 그랬듯이 지금도 일부 개혁주의자들은 '헌법 준수'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헌법 내 진보"를 주장한다.

진보진영의 기준은 헌법 자체가 아니라 사회정의와 계급의 단결이 돼야 한다.

그러나 우파들 역시 헌법을 앞세워 좌파들을 단속해 왔다. 박근혜는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서는 안 된다"고 했었다. "헌법 내 진보" 주장은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맞서기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헌법은 진보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미국의 진보적 학자 하워드 진은 '법과 사회정의가 충돌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정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것이 노예폐지운동가들과 파업을 일으켜 온 전 세계 노동자들이 해 온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기준은 헌법 자체가 아니라 사회정의와 계급의 단결이 돼야 한다.

1987년 헌법

일부 개혁주의자들의 '1987년 헌법은 다르지 않냐'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1987년 헌법'이 거대한 민주화 투쟁의 물결 끝에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당시 개헌 과정에서 민중운동 진영은 철저히 배제됐다. 더한층의 급진화를 차단하려는 군부와 보수 야당의 기만적 타협이 이 헌법에 반영돼 있다.

1987년 민주화 투쟁의 진정한 열매는 법 테두리에 얽매이지 않는 거대한 투쟁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을 쟁취할 동력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제도권 정치와 운동을 분리하며 전자를 우선시하는 개혁주의 관점은 문제가 있다. 이런 관점은 의회적 절차를 통한 "현실적" 개혁만을 진보진영이 추구해야 할 길로 본다.

그러나 보통선거권을 비롯한 수많은 자

유민주적 기본권과 복지 제도 등은 대중 투쟁의 성과로 쟁취한 것들이다. 제1차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국회의원이던 혁명적 사회주의자 카를 립크네히트는 자신의 임무가 "창문을 통해 발언하는 것", 즉 의회 연단을 통해 반전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70년대 북아일랜드 사회주의자 국회의원 버너데트 데블린은 전국을 돌며 노동자들에게 보수당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영국 군경이 아일랜드 해방 평화시위대에 발포한 '피의 일요일' 사건이 벌어지자 의사당에서 내무장관에 투석을 날렸다.

초기의 민주노동당도 '대중운동이 중심'이고, 의원은 그 스피커 구실을 해야 한다는 "거대한 소수" 전략을 내세웠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비록 국회에서는 소수였지만 한미FTA 반대 운동, 2008년 촛불항쟁 등에서 투쟁의 목소리를 대변하곤 했다.

지금의 마녀사냥은 진보정당을 분열·약화시키고 진보진영 내 자기 검열이 자리잡게 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매카시즘 광풍이 휩쓸 후 강력했던 미국 노동운동은 분열하며 급진성과 강력함을 유실했다.

지금 박근혜 정부와 우파도 촛불시위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에 동참한 통합진보당이 '외부세력·종북세력'이라며 이간질하고 있다. 골든브릿지 사측은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종북세력'으로 모는 가정보신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마녀사냥이 힘을 얻을수록 웃는 쪽은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이다. 그 점에서 '민주당 왼쪽의 득표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통합진보당을 도려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매우 우려스럽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태도는 진보진영을 분열·약화시키려는 우파의 시도에 말려드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단결된 투쟁으로 진보 분열 시도를 저지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김지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꿈수로 누더기가 된 노동시간 단축 방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2016년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연장근로는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허점을 악용해 그동안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다. 이 덕에 기업들은 법정 근로시간(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주당 12시간)와 휴일근로(토, 일 각 8시간)를 합쳐 주당 68시간까지 노동자들을 부려먹었다.

그런데 이런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64퍼센트인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퍼센트로 높이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위해선 일자리 2백 38만 개를 만들어야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2017년까지 연평균 노동시간을 1천9백 시간대로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12년

기준 2천92시간이나 된다. 네덜란드·노르웨이·독일 등이 1천5백 시간 미만인 것에 대면 한국 노동자는 주요 산업국보다 연간 4백~5백 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을 파괴하는 장시간 노동시간 체제는 바뀌어야만 한다. 게다가 법정 노동시간 52시간만 준수하더라도 일자리를 70만 개 가까이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 점에서 많은 노동자가 이번 발표에 기대를 걸 것이다.

그러나 이번 당정합의는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우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시기를 2016~18년으로 미루고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미 수년 전부터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결해 왔는데

말이다.

따라서 "행정 해석을 바꾸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늦추면서 꿈수를 부리고 있는 것"(민주노동 김은기 사회공공성본부 국장)이라는 비판은 옳다.

임금 삭감과 노동 유연화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노사가 합의하면 한시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8시간 더 늘려 주당 20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연장근로를 20시간까지 늘려 주면, 연간 평균 노동시간을 주 60시간까지 맞추는 것이 가능해진다.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취지를 거의 무력화하는 방안인 셈이다.

셋째, 당정합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특례 제도는 운수업, 금융업, 의료업 등에서 연장근로를 12시간 이상 허용하는 제도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악법 중 하나다.

정부안대로 하면, 특례업종 노동자 수는 전체 노동자의 33퍼센트에서 14.7퍼센트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오랫동안 근로시간 특례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을 요구해 왔는데, 이를 물타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할 방안이 전혀 없는 임금 삭감 방안이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통상임금으로는 생활하기 힘들어, 야근·특근 등을 하고 초과근로수당을 받아 임금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휴일근로수당은 전체 임금의 약 15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휴일근로가 줄어들면 그만큼 임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게다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도 임금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주당 52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아닌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른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노동시간이 조금 줄어들어 부족해진 인력을 저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려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방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최대한 늦추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임금 삭감·노동유연성 확대를 결합시키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경총을 비롯한 기업주들은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길길이 날뛰고 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 착취에 조금의 흡집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주들의 이런 태도와 악화하는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건대, 입법 과정에서 이 법안은 더욱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즉각 단축하라고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또, 임금 삭감과 노동유연성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을 대폭 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는 요구도 결합할 필요가 있다.

강동훈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 일·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면 대신 다른 일·주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현행 3개월)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 내로 맞추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사진 제공 (오마이뉴스) 김우성 기자

동양그룹의 사기 행각과 이를 눈감은 정부 당국 때문에 개미 투자자 5만여 명이 피눈물을 쏟고 있다. 10월 9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피해자들의 집회.

살얼음 기업 부실과 눈덩이 국가 부채

손실과 빚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정선영

최근 재계 38위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은 한국 경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 준다. 동양그룹은 건설 경기 부진 때문에 핵심 계열사인 동양시멘트가 적자를 내면서 기업 부실이 심각해졌다. 여기에 골프장 등 무리하게 벌인 사업이 실패하며 생긴 빚을 돌려 막다가 결국 여러 계열사들이 함께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해 웅진그룹 부도, 올해 초 STX그룹 부도에 이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 것이다.

게다가 수년간 계속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다. 건설업 불황 때문에 건설사 중에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47.5퍼센트나 된다.(대한건설협회)

건설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의 수익성도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상장기업 경영을 분석한 것을 보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제외하고 세전 순이익율은 3.5퍼센트로 2011년 3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동부·두산·한진·현대 그룹 등이 제2의 동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틈만 나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한국 경제는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한국 경제 불안정은 세계경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회복은 너무나 더디다. 미국은 여전히 불황 전에 전 쥘 일자리가 9백만 개가량 적다.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1978년 이후 최저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막대한 양의 국채와 주택담보부증권을 사들이는 양적완화 정책을 펴 이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미국 정부 폐쇄와 디폴트 위기에서 보듯 부자들에게 퍼 준 돈은 미국의 재정적자로 돌아와 미국 경제에 짐이 되고 있다.

퍼 준 돈

유럽과 중국도 최근 경제가 회복한다지만 그 회복세가 미약하고 곳곳에 자리잡은 금융 부실과 부채 폭탄 때문에 불안정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인도·브라질 등 신흥공업국들의 경제가 요동쳤듯 제3세계에서 외채 위기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세계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세계경제는 2008년 추락 이후 6년이 지났지

경제 위기의 원인인

낮은 이윤율과 높은 부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긴축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악화시켰다.

만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 위기의 원인인 낮은 이윤율과 높은 부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자본주의가 새롭게 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려면 막대한 부채와 수익성이 낮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긴축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악화시켰다. 정부 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케인스주의 정책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연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곳곳에서 부채를 누가 갚을 것인지 둘러싸고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보험제도를 후퇴시키려는 미국 공화당의 공격에서 보듯이 지배계급은 복지를 삭감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공격해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은 줄고 곳곳에서 빚은 늘었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국가 부채도 급격히 늘고 있다.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 빚을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려 한다.

그래서 동양그룹은 5만 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 동양그룹 총수 일가는 파산 직전까지 개인투자자들을 속여 기업어음을 판매했다. 금융감독원 등 정부 당국자들도 이런 과정을 수수방관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복지 공약 후퇴, 공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하며 국가 부채의 책임을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또 감세 혜택과 기업 규제 완화, FTA, 한대평양동반자협정(TPP) 등을 추진하며 기업의 수익률을 떠받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재정적자 원인은 복지가 아니다

한국의 국가 부채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08년 말 3백9조 원가량이었던 국가 부채가 올해는 4백80조 원가량으로 늘었다.

게다가 공공부문 부채도 5백20조 원이 넘어 국가 부채와 합하면 이미 1천조 원을 돌파했다. 한 해 이자만도 20조 원이 훌쩍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언론과 정치인 들은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며 난리다. 그러나 국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복지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기업 퍼주기 정책 때문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01~10년 정부 부채 증가는 2백60조 7천억 원 중에서 46.2퍼센트인 1백20조 5천억 원은 외화자산 매입 기금이 었다. 수출 대기업을 위한 저환율 정책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은 것이다.

게다가 2008년 경제 위기 직후에 정부가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기업에 투입한 자금은 무려 4백20조 원이 넘는다.

또 정부는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건설 업체들에 막대한 특혜를 줬고, 그 빚은 고스란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이 짊어졌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때문에 8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떠맡아 이자로 하루에 12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철도공사의 부채도 철도공사가 적자에 허덕이던 인천공항철도를 1조 2천여억 원을 들여 매입하고, 용산개발 사업이 부도 나는 등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이 실패하면서 낮은 결

과였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 정책도 정부 재정을 크게 악화시켰다.

정부는 올해 20조 원에 달하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런 부족분은 부자 감세와 재벌 퍼주기를 중단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복지비는 OECD 국가에서 꼴지 수준이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비 지출은 10퍼센트로 OECD 국가 평균인 21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보수진영은 복지를 공격하고, 철도 등을 민영화하고,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등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 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새로운 불황으로 빠질 수 있는 미국 예산 위기



미국 공화당과 오바마가 충돌하며 연방정부 폐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정치적 충돌 아래 갈린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살펴 본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이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와 공화당이 의회에서 충돌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또다시 폐쇄됐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백악관과 공화당 주도의 하원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탓에 상당수 공무원이 일시적 해고를 당했다는 점이다.

전에도 연방정부가 폐쇄된 적이 있다. 예를 들면, 1995~96년 민주당 소속 대통령 빌 클린턴과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 뉴트 김리치가 대립했다. 그 대립이 경제에 미친 영향은 작았고 결국 공화당이 물러섰다.

[둘째는] 이번 경우는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기존 채무를 상환하고 계속 대출을 받으려면 미국 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화당 내 강경 우파인 티파티 광신도들은 오바마가 곧 시행될 의료보험 개혁안을 보류하지 않는 한 의회의 승인을 막을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미국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면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다. 달러화는 주요한 세계 기축통화고, 미국 정부가 대출을 안정적으로 받아야 미국 경제와 국제 금융계 모두 순탄하게 작동할 수 있다.

북미에 사는 내 동료들은 미국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결국 공화당이 먼저 꼬리를 내리고 오바마와 협상에 나서지 않겠냐는 예측이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미국 정치가 단지 번덕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미국 정치는 지배계급의 이익과 갈수록 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하다.

티파티 철학의 주된 요소 하나는 균형예산이다. 티파티는 정부 차입을 부도덕한 것으로 보고, 그들 중 일부는 균형예산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채무불이행을 강요할 태세까지 돼 있다.

혼란 속에 있지만, 그들도 상황을 알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공공 부채와 민간 부채 덕에 미국 경제가 부양되고 있는 상황 말이다. 중앙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제도가사회(연준)는 최근 양적완화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연준은 달러를 찍어 내 이 부채의 일부를 사들이면서 금융계에 돈을 쏟아부었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연방정부의 인위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공화당 우파의 지적은 옳다. 그러나 막대한 부채로 돌아가는 기계를 멈추면 또 다른 불황이 촉발될 수 있다. 티파티의 전략은 베트남 전쟁 중 한 미국 소령이 말한 전략과 비슷하다. “그 마을을 구하려면 먼저 그 마을을 파괴해야 한다.”

루스벨트

이 자유시장 신봉자들의 입김이 왜 이렇게 썰까? 이는 미국 남부의 정치와 큰 연관이 있다. 오바마는 처음 당선했을 때 자신을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비교하길 즐겼다. 루스벨트는 뉴딜 정책으로 1930년 대공황에서 미국 경제를 살려 냈다고들 한다.

그러나 루스벨트는 오바마보다 훨씬 더 저돌적인 정치인으로 민간 자본을 강하게 규제했다. 루스벨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민주당이 의회에서 확고하게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아이라 카츠널슨이 최근작 《공포 자체》(Fear Itself)에서 보여 줬듯이, 당시 민주당이 의회 다수파를 차지하는 데 남부의 표가 중요한 구실을 했다.

당시 남부는 여전히 일당 지배 지역이었고, 흑인은 투표권이 없었고, 민주당이 정치를 지배했다. 민주당은 의회 다수파라는 힘을 이용해 루스벨트의 경제적·사회적 개혁을 추진했다.

남부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루스벨트는 흑인에 대한 폭력 사건에 전혀 손을 쓰지 않았고, 백인 우월주의를 담은 짐 크로법을 그냥 놔뒀다.

이런 상황은 1960년대에 와서야 바뀌었다. 존 F 케네디와 린든 존슨의 민주당 정부는 공민권 운동의 압력을 받아 짐 크로법을 폐지했다. 이 덕분에 1968년 리처드 닉슨의 당선을 시작으로 공화당은 민주당에 불만을 품은 백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남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제는 공화당이 남부를 지배한다. 남부의 선거구는 공화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화당 현직 의원들은 민주당이 아니라 같은 공화당 경쟁자들의 도전을 더 신경 쓰게 됐고, 더욱 우경화한다. 그래서 티파티가 정치적 힘을 얻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슬픈 점은 오바마가 공화당과 정부의 추가 대출을 허용하는 합의를 이루려 하면서 이미 너절해질대로 너절해진 복지를 더 삭감할 태세가 돼 있다는 사실이다.

뉴딜 정책과는 한참 떨어진 상황인 것이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74호

번역 최병현

복지 먹튀와 진보의 대안 논쟁

‘부자에게 세금, 노동자에게 복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기초연금에 이어 박근혜의 복지 공약 먹튀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대선 공약이던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사업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기초연금도 실제 입법예고된 법안은 발표한 내용에서 더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 수급액은 10만 원인 것처럼 말해 놓고 실제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초연금 인상 기준을 ‘물가’로 바꿔 기초연금의 실제 가치는 점점 떨어질 것이다. 결국 24년 뒤에는 최고 수급액이 현재 가치로 따져 10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평생을 공주처럼 산 박근혜는 지금도 월급으로 1천6백만 원을 받고, 퇴임 뒤에는 현직 대통령 월급의 95퍼센트를 연금으로 받을 것이다. 4대강에 세금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이명박도 지금 매달 1천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고 있다.

이런 자들이 난방비가 없어 옷을 아홉 겹이나 껴입고 목장갑까지 끼고 자다가 얼어 죽은 채 5년 뒤에 발견된 할머니의 삶을 이해할 리 없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면 슬픔과 함께 관한 불안감을 느끼는 평범한 사람들의 심정도 말이다.

박근혜는 불만이 확산되며 지지율이 급락하자 복지 공약 ‘폐기’는 아니라며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민대 타협위원회를 만들어 복지와 증세를 연동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겠다”며 눈치를 살피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번 세법 개정안에서 드러난 것처럼, 박근혜가 내놓을 증세안은 **심중팔구 노동자 증세**가 될 것이다. 위낙에 소득 양극화가 심하고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조세 제도 때문에 ‘보편적 증세’도 실제로는 노동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것이

다.

진보정당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은 이런 박근혜에 맞서 부자 증세 등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재벌과 고소득층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 위기 심화 속에서 세출은 늘어나고 세수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판과 폭로뿐 아니라 분명한 대안 제시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돈은 어디에서

그 점에서 진보진영 일부가 제시하는 ‘보편적 증세’ 대안은 부적절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은 “지난번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부족하지만 감세 기조를 처음으로 증세 기조로 전환했다는 의미에서 큰 방향에서는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중산층부터 누진 동시 과세를 시작해야 부유층을 압박하며 부자 증세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기업주·부자의 세금을 줄여 주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편법·불법으로 세금을 때 먹고, 나아가 수백조 원을 해외에 빼돌리는 상황에서 ‘중산층부터 과세’가 얼마나 효과를 낼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최근 사회복지세 신설 법안을 발의했는데, 먼저 2016년까지는 소득세를 1천만 원 이상 내는 고소득자들(전체의 3~5퍼센트)과 법인세액 1백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중과세하는 부자 증세안이다.

그런데 박원석 의원은 2017년부터는 모든 소득세액의 10퍼센트를 사회복지세로 걷는 증세 계획을 제시했다. 또 연간 4천5백만 원을 넘는 소득 초과분에 대해 5퍼센트의 근로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을 폐지하도록 했다. 노동자 일부에게도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진보진영

박근혜에게는 노후 빈곤과 질병에 대한 우리의 근심보다, ‘부자 증세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세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도 있다. 예컨대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은 “막연하게 대기업이 더 내야 한다는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며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는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신경 쓰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선진국들에 견줘 법인세율이 크게 낮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삼지만, 노인빈곤율 1위, 자살율 1위인 나라에서 법인세율이 높아서 안될 까닭이 없다.

게다가 “10대 재벌 그룹이 이익 가운데 배당이나 투자를 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규모가 2012년 현재 4백5조 원에 이른다. 그중에서 당장 현금으로 동원 가능한 현금성 자산도 현재 1백23조 7천억 원이다. 세금 더 내고 나면 돈이 없어 투자 못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소장)

단결을 위한 요구

오늘날처럼 경제 위기가 장기화하는 시대에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 아니라 기업주·부자에게서 재원을 가져와야 실질적인 재분배가 가능하다. 박근혜의 ‘증세 없는 복지’가 파산한 까닭이기도 하다.

물론 자본가들도 어느 정도 복지가 불가피하다고 여긴다.

예컨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시스템, 일정한 교육, 최소한의 주거, 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 등은 자본가들도 대부분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산에 차질이 생겨 이윤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 보편적 대학 교육, 충분한 노후연금, 노후에 큰 부담이 되는 질병에 대한 의료 서비스 등 말이다.

오늘날 같은 장기 불황에서는 자본가들에게 이처럼 노동자들이 바라는 복지를 위한 투자는 그 우선순위에서 한참 아래에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오늘날 복지를 확대하려면 노동자들이 단결해 투쟁에 나서도록 하는 요구가 필요하다.** 투쟁이야말로 이런 요구를 성취할 가장 현실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투쟁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만들거나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대안은 현실에서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자에게 세금을, 노동자에게 복지를’이라는 한국 진보진영의 전통적인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고 적합한 요구다.

장호중

의료 복지도 먹튀하고 민영화로 달려가는 박근혜

정형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박근혜 정부의 의료 관련 공약의 핵심은 ‘4대 중증 질환 1백 퍼센트 국가 보장’이었다.

‘1백 퍼센트 국가 보장’이란 구호는 그동안 진보진영이 주장한 ‘무상의료’를 차용한 것이고, 이를 4대 중증 질환에 먼저 적용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현실성’을 드러내려는 시도였다. 즉, 부분적이지만 ‘실행하는 무상의료’로 대중을 사로잡으려는 슬로건이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당선하자마자 인수위 시절에 간병비를 제외한다고 밝혔고, 취임 후에는 3대 비급여(차등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를 모두 제외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약은 점점 누더기가 돼 갔다. 지금은 사퇴한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은 인사정문화에서 이 공약이 ‘선거 캠페인용’일 뿐이라고도 했다.

6월에는 비급여뿐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 영역(치료 영역)도 전액 보장하는 것

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최종으로는 4대 중증 질환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기껏해야 이전보다 25퍼센트 정도 경감되는 안이 제시됐다.

4대 중증 질환은 원래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이 5~10퍼센트밖에 안 되는 보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었다. 이 구간의 보장성을 1백 퍼센트로 만드는 것조차 지키지 못한 것은 사기였다.

이처럼 공약을 누더기로 만들고 사기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 노선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 날 한국 역사 최초로 공공의료기관 폐원 시도가 일어났다. 바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원 시도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복지정책의 방향을 예측케 했다. 일단 지자체의 복지 축소에 대해 중앙정부는 철저하게 ‘불개입’을 내세웠다. 즉, 정부가 복지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적 방임을 천명하고, 지방정부 탓을 하면서 실제로는 복지 축소의 면죄부까지 얻은 것이다.

둘째, 그나마 건강보험으로 대표되는

보험 부분에서는 째짜한 복지 확대는 이루어더라도, 공급 부문에서는 병원자본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개월간 ‘메디텔’, ‘보험업의 환자 유치·알선’,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 다양한 의료민영화, 영리화 시도를 계속하면서, 병원으로 돈을 벌겠다는 의지를 불살랐다.

그나마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재정도 국민들이 병원을 가지 않아 생긴 건강보험 후자를 이용하는 방안만 제시한다.

의료비 상승

또한,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재정부안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에 건강보험료를 추가하는 ‘건강세’ 등을 거론했다. 즉, 의료민영화는 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노동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만 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나 치료재, 검사 등(비급여)에 대해서도 ‘선별급여’라는 차등 급여구간을 두려고 한다.

병원들이 진료비 인상의 주원인인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늘리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가격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그래서 비급여 진료 중에 일부에 대해 건강보험이 30~70퍼센트만 지원하는 선택구간을 두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면 병원들이 제멋대로 가격을 정해 받던 각종 검사 비용 등의 가격이 정해지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 의료비 상승은 볼 보듯 뻔한 일이다. 비급여 항목들은 대부분 비필수의료(성형, 미용 등)거나 아직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들인데, 이를 반쯤 인정해 주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들은 이런 진료를 크게 늘릴 것이다. 다른 모든 진료가 그렇듯 환자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게다가 그동안 이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평가기준이 없어 곤란을 겪던 민간보험 입장에서서는 너무나 반가운 일이다. 건강보험의 부분 부담으로 보험 지급액을 일부 줄일 수 있고, 가격 표준화로

분명한 재정계획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 기초가 되는 심사평가는 건강보험에서 다 해 주니 일석이조다.

사실 가장 효과적인 가격 통제는 정부가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지면 정부가 대부분의 진료비를 결정하고 통제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간의료보험은 필요없게 된다. 이 때문에 필요한 비급여를 모조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은 민간보험에 직격탄이 되고, 이를 막는 것이 민간의료보험에게는 사활을 걸 문제다. 선별급여라는 핏수가 나온 이유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5월 민간의료보험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알선할 수 있게 해 주고, ‘메디텔’이라는 의료호텔을 통해 병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와 민간보험, 그리고 병원자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를 위해 자신의 공약은 완전 누더기에 사기가 돼 여론의 지탄을 받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시장화 소신 신임 사장, 민영화 위한 법 정비, 적자선 매각 ...

숨길 수 없는 철도 민영화 계획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이 구체화돼 하나둘씩 폭로되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민영화는 아니라는 정부의 거짓말도 점점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경향신문>이 폭로한 적자선 민영화 계획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정선선, 진해선 등 8개 지방 적자노선을 단계적으로 사기업에 매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발뺌했지만, 이미 정부는 '철도발전방안',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종합대책(안)' 등에서 적자선 민영화 계획을 명시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철도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며 분할 민영화를 위한 법률 정비에 착수했다. 노선·사업별 분할과 면허 규정 등을 담은 이 법 개정안은 '박근혜판 철도 민영화법'이라 부를 만하다.

요컨대, 적자선 매각, 철도 관련법 개정 추진 등은 철도 산업의 구조개편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퍼즐의 일부분들이며, 그 방향은 명백한 민영화를 향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임명된 철도공사 신임 사장 최연혜는 지난해 초 언론 기고에서 'KTX 민영화 반대' 주장을 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일부 언론은 그를 "민영화 반대 사장"이라 칭했다.

그러나 최연혜는 아직도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하는 철도노조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연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동시에 "현 정부안이 아니라 지난 정부의 철도 민영화를 반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어떻게든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최연혜가 민영화에 진지하게 반대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지난 총선에서 박근혜와 함께 유세에 나선 최연혜.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도 있다. 최연혜는 취임사에서 "2015년 흑자 전환"을 강조하며 "과감한 경영 효율화"를 내세웠다. "KTX와 일반열차의 운행체계 최적화를 통한 수익 극대화, 인력운영 효율화와 물류분야의 혁신을 통한 과감한 비용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과거 그의 이력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최연혜가 2005~07년 철도공사 부사

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당시 철도공사 측은 8백70여 명의 인력을 감축했고, 정규직이 맡았던 업무들을 외주화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최연혜는 당시 부사장으로서 이런 상업적 공사 운영 방향에 충실했다.

“흑자 전환”

또 최연혜는 대구역 열차사고는 “인재”라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즉위를 해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겠

다고 밝혔다. 안전투자 미비, 인력감축이라는 사고의 진정한 원인을 가린 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사측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최연혜의 과거 전력과 현재 그의 언행을 봤

이정원



요금 인상, 대형 참사, 인력 감축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철도 민영화 반대 특별 페이지

<http://left21.com/nosale>

철도 관련법 개악 추진 — 민영화 길 닦기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철도사업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11~12월 국회에 상정하려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이는 '경쟁체제 도입(민영화)은 법적 문제가 없다'던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보여 준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6월 작성한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종합대책(안)'(이하 종합대책)에서 민영화의 주요 세부 계획들을 제시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박근혜 정부로선 법 개정 문제로 국회에서 논란이 이는 것은 피하고 싶었지만, 철도산업 전체를 산산조각 내 민영화하는 대수술을 감행하려면 법 개정이 수반돼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 강성우파 정부의 면모를 드러내며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등에 업고 법률 정비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번 법률 개정안들은 명백히 철도 분할 민영화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철도 노선·사업별 회계를 분리해 매각을 쉽게 만들었다. 이는 수서발 KTX를 비롯한 신설 노선 민영화, 진해선·정선선을 비롯한 적자선 민영화, 물류자회사 설립, 차량정비·유지보수 회사 설립 등 일련의 분할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또 신규사업자에 대한 면허 절차도 정비해, 사기업 진출의 길을 더 주려 한다.

더구나 회계 분리가 시행되면, 그간 흑



10월 11일 철도사업법 개정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자노선에서 생긴 수익으로 적자노선 운영을 지원했던 '교차보조'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적자선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요금상한제 폐지

둘째, 운행 지역·속도 등에 따른 '등급별 요금제'를 도입해 요금 인상을 쉽게 만들었다. 국토부는 이미 6월 종합대책에서 고속열차, 준고속열차 등에는 요금 상한제를 폐지해 요금 인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시간대별 차등 운임을 적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요금 폭등의 재앙을 불러 온 영국식 모델로, 정부가 내세운 '요금 인하'가 사기였음을 보여 준다.

셋째, 철도공사 자산을 매각해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우선 상환한다는 특례조항을 명시했다. 이는 공항철도 등의 자산 매각 계획을 담은 종합대책과 맞물려 더한층 우려를 낳고 있다. 민자사업으로 설

립대 막대한 정부 보조금만 퍼 주다 결국 2009년에 철도공사가 부채를 떠안으면서 인수한 인천공항철도를 또다시 사기업에 팔아 넘기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법률 개정안은 '효율성 경쟁'을 위한 평가 제도에서 열차운행 횟수 감축 등을 도입하고, 지자체에 공익서비스 비용(PSO)을 떠넘기는 등의 조치들을 담았다.

더구나 정부는 '국토부장관령'으로 여러 세부 사항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향후 국회 의결 없이 각종 개악들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정부는 지금 법 개정과는 별도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추진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철도노조, 범대위 등 민영화 반대 운동은 이번 개악안의 문제점을 낱알이 폭로하며,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

박설

안전을 불모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

1인 승무 확대 재추진 중단하라

철도공사 측이 중앙선(청량리~제천) 여객열차 기관사 1인 승무, 경부선 화물열차 기관사 단독 승무 시범 운영을 다시 밀어붙이려 한다.

지난 7월 노동자들이 1인 승무 확대 시범운행을 막아 낸 후, 사측은 '1인 승무 확대의 안전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비용 2백만 원도 못 대겠더라 약속을 파기하고 시범운영 강행을 예고한 것이다. 승객과 노동자들의 안전은 아랑곳 않고 말이다.

기관사 2인이 하던 업무를 혼자 하게 되면, 안전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가 보여 줬듯 말이다.

더구나 지금 철도공사 측이 1인 승무를 도입하려는 중앙선의 경우, 산악지대와 곡선·터널이 많고, 하나의 선로에 여러 종류의 열차가 다니는 단선 구간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사고가 한 번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화물열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부곡의 화물열차 기관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화물열차는 여객열차와 달리 열차 승무원도 없는데도 차량은 20~30량으로 여객열차보다 길다. 혼자 운전하면 뒤를 감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1인 승무가 도입된 곳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대전의 한 기관사 노동자는 "우리가 관할하는 경부선 여객열차 구간에서도 1인 승무가 시행되면서 사고가 늘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지난해 사고 발생 건수는 2인 승무 시절의 네 곱절이나 뛴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역 통제합과 무인역 확대, 시설 유지·보수 외주화로 사고에 대처하기 어려워졌는데, 1인 승무까지 도입돼 사고 대처 능력이 훨씬 약화된 것입니다."

1인 승무는 기관사들의 노동조건도 악화시킨다. 2007년 카톨릭대학교가 작성한 보고서는 1인 승무를 하는 서울도시철도 기관사들의 경우, 공황장애가 일반인의 7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4배, 우울증이 2배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따라서 대형 참사, 노동조건 악화를 낳을 1인 승무제 확대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나아가 이미 도입된 1인 승무도 폐지돼야 한다.

1인 승무 확대 저지는 비단 해당 노선 기관사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측은 경부선 화물열차를 시작으로 모든 노선 화물열차에 1인 승무를 도입하려 할 것이다. 신호시스템이 미흡하고 단선인 중앙선에서 1인 승무를 강행하는 것은, 앞으로 '물지마 1인 승무'를 관철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게다가 1인 승무는 민영화 길 닦기용 인력 구조조정의 일환이기도 하다. 1인 승무가 확대된다면 차량·열차승무·유지보수 등의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으로 한층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사측의 1인 승무 확대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번 투쟁이 또다시 승리한다면, 노동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며 민영화 반대 운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은영

미일 군사 동맹 강화와 동아시아 불안정

이현주

동아시아에서 긴장의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최근 열린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미국은 “집단지 자원권 행사 … 방위예산 증액, 방위계획 대강의 개정 등”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표명했다. 미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에 날개를 달아 주며 나선 것이다. 여기에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더 큰 구실을 해줄기를 바라는 미국의 바람이 반영돼 있다.
냉전 해체 이후 미일동맹은 미국의 패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일이 군사적으로 긴밀해지고, 일본의 구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1997년에 미국과 일본은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일본 자위대의 활동 무대를 일본 영토를 넘어 일본 주변지역으로 확장한 바 있다. 지난해 미일정상회담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동맹방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이 ‘지키는 방위’에서 벗어나 외부 사태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었다. 조만간 미국과 일본은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된 내용을 담은 16년 만에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국주의 부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편들고 나선 것은 미국의 처지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 회귀’를 천명했으면서도 동시에 군비를 대폭 감축해야 하는(향후 10년간 안보 예산 1조 달러(약 1천70조 원) 삭감) 처지다. 최근 오바마가 정부 폐쇄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포함한 아시아 순방을 취소한 것도 미국의 어려운 처지를 보여 줬다. 현재 아베는 일본을 ‘정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다. 얼마 전 일본은 사실상 항공모함인 ‘이즈모호’를 진수했고, 해병대 창설도 준비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로켓 발사 실험을 했고, 자위대의 선제 공격권 보유도 검토 중이다. 동아시아에서 패권 유지를 위해 팔마니가 필요한 미국이 볼 때 아베의 이런 대법한 움직임은 반가운 것이다. 이번엔 미국과 일본은 P8 초계기, 무

한미연례안보회의

미국에 고분고분한 박근혜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전일 열린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미국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늦추는 조건으로 한국에 MD 편입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한미 양국은 공동성에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 방어, 교란 및 파괴의 포괄적 동맹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양국 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상호응용성을 증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사코 미국 MD에 편입되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회담 직후 정부가 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와 스텔라드 미사일(SM-3)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정할기 글로벌호크, F35B 전투기 등의 첨단 무기를 일본에 배치하고, 난세이 제도(다오위다오·오키나와 등을 포함한 일본 남서쪽 섬들) 등의 지역에서 자위대와 미군이 군사시설을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또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밝히며 중국에 견제구를 날렸다. “지역 파트너의 해상 안전을 위해 연안 순시선이나 훈련을 제공하는 일본의 대응”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와 연계해 계속해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감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것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늘리고 싶은 일본의 야욕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아베는 이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제적 협력뿐 아니라 군사적 협력도 강화하는 중이다.

다른 한편, 미국과 일본의 이번 공동선언문은 한미일 사이의 협력이 중요함도 강조했다. 한미일 삼각 동맹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는 데서 핵심이다. 그동안 미국은 한일 양국에게 역사 문제에 너무 집착 말고 자기 밑에서 힘을 합치라고 촉구해 왔다.

한국을 식민 지배하고 야만적으로 유린했던 일본이 재무장해서 자위대를 이끌고 언제든지 한반도를 들락거리며 미국의 패권에 일조하는 것, 이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한국 내 반발 때문에 미뤄졌던 한일 군사협정도 빨리 체결해서 MD를 뒷받침하라는 게 미국의 요구다. 이번 미일 간의 합의는 동아시아에서의 긴장과 불안정을 높이고 있다. 당장 중국은 미일 동맹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며 반발했다.

중국은 최근 인도네시아와 1백5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합의하는 등 아세안 나라들과 점점을 넓히며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불을 놓고 있다. 다오위다오도 잦은 전투기 추적결과 순시할 때는 로켓 발사 실험을 했고, 자위대의 선제 공격권 보유도 검토 중이다.

이렇듯 오늘날 세계경제의 중심부인 동아시아에서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공공연가계’ 적대하며 이 지역 민중의 삶을 더한층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한미안보회의

두 시스템은 미국 MD 체계의 핵심으로 두 시스템의 도입은 명백히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MD 편입, 방위분담금 증액, 첨단무기 구입 등 미국이 중국 목록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박근혜 정부는 우리의 북지과 평화를 희생하면서 이를 수용하려 할 것이다.



요동지는 동아시아 바다 불안정의 뿌리인 제국주의 자체에 반대해야 한다. 2012년 6월 21일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

남한 지배자들의 딜레마

말은 동북아 평화협력, 몸은 한미일 동맹

김영덕

최근 한 국제연구기관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발표자는 박근혜가 “병전 종식 이후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시점에 집권했다”며, 한반도 주변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유동적”이라고 우려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경제 위기의 심화 속에서 미국·일본·중국 등 주변 열강들의 경쟁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동아시아의 상황을 두고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말하곤 한다. 즉,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는데 반해, 지정학적으로 심사의리 해결되지 않는 경쟁과 갈등이 심하다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일본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남한 지배자들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남한 지배자들한테 중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남한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과 EU(유럽연합)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을 중시해 온 박근혜와 남한 강경 우익조차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

의 우려를 한미일 동맹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자, 박근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자며 미국에 매달렸다. 그리고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맞춤형 억제전략’ 등을 준비하며 MD 체제에 발을 더 깊숙이 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MD 체제에 참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많아지고 있다. MD에 쓰일 만한 무기와 시설도 갖춰 나가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남한이 미국이 추진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를 결정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TPP는 경제적 차원에서 미국의 ‘아시아 회귀’라고 할 수 있는 데 말이다.

맞춤형 억제전략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10월 2일 한미 양국 국방장관들이 합의한 대응 계획, 이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기 공격 가능성을 ‘위협, 사용임박, 사용’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응하는데, 여기에는 위험한 대륙 선제공격 계획이 들어 있다. 또한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과 함께 MD 전략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로써 남한은 미국의 지역 MD 체제에 더 많은 협력을 하게 된다.



사진 출처: 미해군

중국과 제국주의 ②

21세기 중국의 제국주의 대전략

김용욱

21세기 중국 자본주의 발전 속도는 대단했다. 2002~07년 중국은 연평균 10.8퍼센트 성장했다. 2008년 경제 위기 발생 이후의 통계는 더 놀랍다. 미국은 2008~11년 사이 겨우 2퍼센트 성장했지만, 중국은 같은 기간 53퍼센트 성장했다. 그러나 중국 자본주의는 고도화의 측면에서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친다. 예컨대, 2010년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생산량은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미국 제조업 노동자 수는 1천1백50만 명이지만, 중국은 1억 명이 넘는다.
또, 중국은 엄청난 수의 절대 빈곤 인구 문제가 있고, 무차별한 자본축적 과정 덕분에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최저인 30퍼센트 중반이다. 흔히, 오늘날 중국의 부상은 19세기 말 미국과 독일의 부상에 비교된다. 그러나 1900년에 이르렀을 때 독일과 미국은 거의 모든 경제 지표에서 영국을 능가했다. 오늘날 중국은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정상회담에서는 오바마가 없자 시진핑이 ‘큰 행’ 대접을 받았다.
이런 양면성을 봐야 한다. ‘중국의 세기’가 왔다고 주장하는 것도, 중국이 여전히 ‘주변부’ 국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한 면만을 본 것이다. 오늘날 중국 제국주의 대전략(大戰略)에는 중국 자본주의의 이런 모순이 반영돼 있다.
21세기 중국의 대전략
첫째, ‘미국보다 중국의 노동자, 농민, 소수민족이 더 무섭다.’ 중국 공산당 전 총서기 후진타오는 중국을 위해 친미 독재자 무바라크 정부에 공을 들여 2004년 제1차 중국·아랍협력 포럼의 장소로 이집트를 선택했다. 그러나 2011년 무바라크가 무너지고 걸프 왕정들로 시위가 확산되자 중국 정부는 충격을 받았다. 관영 언론인 〈완구시보〉와 〈인민일보〉가 최근 이집트 사태에 관해 논평하면서 “이집트는 왜 단호하게 혁명을 반대해야 하는지 잘 보여 준다”는 논평을 내놓은 배경에는 이런 우려가 깔려 있다.

또, 아프리카는 중국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 제국주의의 허를 찌른 지역이다. 그러나 프랑스와 미국의 말리 개입을 지원하기 위해 5명 병을 유엔군으로 파견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입장은 현 질서 유지에 있다.

물론, 이런 현상 유지 정책은 중동에서 새로운 질서를 파하는 미국과 종종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최근 오바마의 공경은 미국 제국주의가 기존 방식을 수정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줬다. 미국의 약화와 중국의 한계라는 조건이 유지되면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서 들의 갈등은 직접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추세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셋째,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라.’ 중국의 대전략은 중국 국경 근처로 이동하면 강조점이 현상 유지에서 변화로 조금씩 바뀐다. 중국은 인도와 같은 관계이며, 버마·라오스·스리랑카의 권위주의 정인 북미와 유럽은커녕, 전략과 자원의 요충지인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서도 개입할 능력을 크게 제약받고 있다.

예컨대, 중국의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 개발이 군사기지 망(진주목걸이)과 연관됐다는 관측이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파키스탄 정부가 지역 분리 운동을 제압하고 항구를 보호할 수 있을지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업용이라고 뜻을 밝혔다. 이 사례가 보여 주듯이 중국에게는 ‘고라 자유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잡더라. 도·남아공과 함께 만든 브릭스는 이 약점 관계를 있는 이들은 이런 모순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동아시아 갈등과 불안정의 뿌리인 제국주의 질서 자체에 반대하는 관점과 운동 건설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

국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충돌을 조정할 능력이 없다.

예컨대,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중국 상품에 가장 많은 담핑 판정을 내린 나라 중 하나다. 인도가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전략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중·러 군사협력 협정에는 상호방위조항이 없다. 또, 러시아는 중국의 경쟁자인 베트남과 인도에게 최신 무기를 판매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미국의 모험은 중국의 세계 진출을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이었다.

군사력의 제약, 동맹의 부족, 미국의 모험 앞에서 중국 지배자들은 차악으로서 중국 자본주의 성장을 뒷받침한 현존 제국주의적 질서를 대체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모험뿐 아니라 아랍 혁명에도 반대했다.

석유 수입 다변화에도 중국이 필요로 하는 막대한 석유를 추가로 공급할 여유를 가진 지역은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친미 반동 왕정들이다.

그래서 후진타오가 사우디아라비아 의회에서 연설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미국 방문 후 바로 중국을 방문하는 이래적 행보를 보였다.

중국 정부는 중동 정치 중심인 이집트의 안정을 위해 친미 독재자 무바라크 정부에 공을 들여 2004년 제1차 중국·아랍협력 포럼의 장소로 이집트를 선택했다. 그러나 2011년 무바라크가 무너지고 걸프 왕정들로 시위가 확산되자 중국 정부는 충격을 받았다. 관영 언론인 〈완구시보〉와 〈인민일보〉가 최근 이집트 사태에 관해 논평하면서 “이집트는 왜 단호하게 혁명을 반대해야 하는지 잘 보여 준다”는 논평을 내놓은 배경에는 이런 우려가 깔려 있다.

또, 아프리카는 중국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 제국주의의 허를 찌른 지역이다. 그러나 프랑스와 미국의 말리 개입을 지원하기 위해 5명 병을 유엔군으로 파견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입장은 현 질서 유지에 있다.

물론, 이런 현상 유지 정책은 중동에서 새로운 질서를 파하는 미국과 종종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최근 오바마의 공경은 미국 제국주의가 기존 방식을 수정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줬다. 미국의 약화와 중국의 한계라는 조건이 유지되면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서 들의 갈등은 직접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추세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셋째,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라.’

중국의 대전략은 중국 국경 근처로 이동하면 강조점이 현상 유지에서 변화로 조금씩 바뀐다. 중국은 인도와 같은 관계이며, 버마·라오스·스리랑카의 권위주의 정인 북미와 유럽은커녕, 전략과 자원의 요충지인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서도 개입할 능력을 크게 제약받고 있다. 예컨대, 중국의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 개발이 군사기지 망(진주목걸이)과 연관됐다는 관측이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파키스탄 정부가 지역 분리 운동을 제압하고 항구를 보호할 수 있을지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업용이라고 뜻을 밝혔다. 이 사례가 보여 주듯이 중국에게는 ‘고라 자유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잡더라. 도·남아공과 함께 만든 브릭스는 이 약점 관계를 있는 이들은 이런 모순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동아시아 갈등과 불안정의 뿌리인 제국주의 질서 자체에 반대하는 관점과 운동 건설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피했다. 심지어 1995~96년 타이완 위기 당시 미국이 주력 항공모함을 파견하자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

일본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다. 또, 2002년 중국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동남아 국가들과 남중국해 문제의 우호적 해결을 위한 ‘행위 규범’에 합의하기도 했다. 한반도에서는 6자 회담을 중재했다.

그러나 2008년 경제 위기를 전후해 모든 게 변했다. 중국의 회복이 너무 빨라 주변국의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중국 지배자들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를 뒤흔든다는 구상을 좀더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옛 적인 국민당의 한 장군이 1948년 작성한 지도를 근거로 동남아 국가들에게 남중국해 전체가 중국 것임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넣었다. 다오위다오(센카쿠) 문제에서는 일시적으로 일본을 굴복시켰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 유지를 위해 남중국해, 다오위다오, 한반도에서 중국과 주변국 관계를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친미 반동 왕정들이다.

오래하 더 확실한 이유를 제공했을 따름이다.

제1차세계대전
한때 중국의 개혁은 중국과의 충돌시 미국이 치를 대기를 크게 만들어 미국 정부가 동맹들을 방해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엔, 미국 정부의 계산은 동맹 체제를 굳건히 하고 중국을 압도할 연합 군사력을 확보해, 중국이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을 시간과 돈 낭비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제1차세계대전 직전 유럽의 국제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어리석은 사고방식이다.
물론, 미국과 중국은 당장 이런 충돌을 바라지 않는다. 두 나라의 복잡한 경제 관계는 하나의 요인이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 국책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이며, 서방 시장과 기술은 중국의 경제 성장뿐 아니라 지정학 경쟁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중국이 제작한 최신에 7천 톤급 함정 세척과 안타는 독일산 전력 시스템, 프랑스산 레이더, 이탈리아산 어뢰, 우크라이나산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미국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2008년 경제 위기 발생 후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수출을 대폭 늘려 위기의 충격을 완화했다.
또, 미국이 세계경제 2위 대국가 그 앞마당에서 상대하는 데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많은 미국 기업들은 이미 타이완과 중국 사이 합의의 균형이 깨졌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에게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상대하는 것은 장기적 문제 때문에 군사적 포위, 이간질과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한다.
그래서 대중국 군사 계획인 공해전투의 새 보고서에서는 중국이란 단어가 빠졌다. 공해전투 계획 작성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 퇴역 장군 러프헤드는 이 계획이 중국을 노린 것이냐는 질문에 자신의 아이폰을 보여 주며 말했다. “반야 우리가 중국을 봉쇄하고 싶다면 왜 제가 중국에서 조립된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낙관적인 이들은 이런 ‘자체’를 보면서 두 나라가 중국저력 관계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이 두 나라가 자본주의 경쟁 논리 때문에 발생하는 온갖 변수들을 통제할 수는 없다.
연재 마지막 글에서 이 변수들과 그것이 국제 노동자·민중 운동에게 제기하는 과제에 관해서 다룰 것이다.



사진 출처: Ecosia Images

“파블로스를 살려 내라. 파시스트를 박살내자” 9월 25일 아테네에서 열린 반파시즘 시위.

공지에 몰린 그리스 황금새벽당

혁명적 좌파가 주도한 반나치 투쟁의 성과

차승일

9월 28일 그리스 경찰은 범죄 집단 결성 혐의로 황금새벽당 대표 니콜라오스 미할톨리아코스와 소속 의원들을 체포했다. 그리스에서 당대표와 현직 국회의원이 체포된 것은 1974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스의 우파 총리 안토니스 사마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세계에 나치가 발붙일 공간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명한 반파시즘 활동가이자 아테네 시의원인 페트로스 콘스탄티누를 기소하고 황금새벽당을 연립정부에 끌어들일 생각까지 하던 정부의 수장이 반파시즘 투사 행세를 하니 과연 “극적 반전”이라 할 만하다. 이는 그리스 계급투쟁 발전의 새로운 발판이 될 수도 있다.

많은 평론가들이 지적하듯, 이런 “반전”의 이면에는 나름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 수 있다.

즉, 정부의 정당성을 강화해 정국 주도력을 회복하고, 여론의 관심을 진축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고, 황금새벽당에 쫓겨난 우파 유권자를 탈환해 재결집시키려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반전” 드라마를 연출한 진정한 힘은 아래로부터 대중행동에서 나왔다.

9월 18일 반파시즘 활동가이기도 했던 유명 힙합 가수 파블로스 파이샤스가 황금새벽당 당원에게 살해된 뒤 그리스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들끓었다.

황금새벽당을 규탄하는 항의 시위는 대량해고에 맞서 미리 예정돼 있던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과 맞물렸다.

공공부문 노동자 수십만 명이 파업을 벌인 9월 25일 저녁, 아테네에서만 5만 명이 넘게 모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이에 견주면 겨우 2백여 명이 모인 황금새벽당 지지자들의 시위는 매우 보잘것 없었다.

그리고 이 시위에는 파업을 벌이고 있던 노동자들이 ‘나치는 우리 작업장에서 꺼져라’ 하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대거 참가했다.

이처럼 노동자 파업과 반파시즘 시위가 서로 고무하는 상황은 그리스 지배자들에게는 끔찍한 일이었을 것이다.

최근에는 경찰과 군대가 황금새벽당과 유착돼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었으므로 대중의 분노가 곧 정부로 향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가뜩이나 취약한 정부로서는 더는 황금새벽당을 비호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황금새벽당 지도부의 체포는 “위대한 반파시즘 운동의 승리다.”

그리고 이번 승리를 일구는 데서 그리스의 혁명적 좌파가 중요한 구실을 했다.

나치는 꺼져라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등 혁명적 좌파들은 2009년에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을 결성하며 차근차근 반파시즘 운동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기성 정치권에 대한 환멸이 자라나며 파시즘이 성장할

가능성이 보였고, 파시즘에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황금새벽당이 2012년 총선에서 성공을 거둔 뒤 KEERFA의 활동은 더 중요해졌다. 선거에서 승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황금새벽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주민과 좌파를 공격하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

KEERFA는 황금새벽당의 실체를 폭로하며 운동을 광범하게 조직하려 애썼다. 그 결과 올해 1월에는 2만 5천 명이 모인 대규모 시위를 조직할 수 있었다. 황금새벽당 당원이 파키스탄 출신 이주민을 살해한 것에 항의하는 시위였다.

이런 몇 년간의 꾸준한 활동들이 이데올로기적·조직적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 놓은 덕

분에 이번에는 운동이 훨씬 더 큰 규모로 일어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10월 5~6일 그리스에서는 KEERFA 전국 총회와 국제 반파시즘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 6백 명 이상의 많은 활동가들이 모여 투쟁 경험을 나누고 운동의 승리를 축하하며 이후 투쟁의 방향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활동가들은 운동이 더 전진해야 한다고 토론했다. 예컨대 KEERFA 소집자 페트로스 콘스탄티누는 이렇게 주장했다.

“투쟁을 위한 새로운 분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운동이 진척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과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정부를 끌어내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치를 뿌리 뽑을 수 있을까

아래로부터 압력에 밀려 그리스 정부가 황금새벽당을 공격하고 나섰지만, 이것만으로 파시즘이 완전히 사라지리라 고 볼 수는 없다.

우선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 체포한 황금새벽당 소속 의원 중 세 명을 나흘 만에 풀어 줬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황금새벽당은 국가, 특히 국가정보국(그리스 판 국정원)과 경찰 등 보안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예컨대, 당대표 미할톨리아코스는 1970년대에 극장에 폭탄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금방 풀려났고, 이후 보안 경찰의 정보원 노릇을 하며 정치 인생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국가정보국의 한 고위 간부가 황금새벽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해임됐다. 이 자는 지난해에 총리 사마라스가 복직시킨 자였다.

경찰의 비호 속에 황금새벽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길거리에서 대놓고 이주민과 좌파를 습격했다. 이 캠페들이 그동안 벌인 테러가 얼마나 많았는지, 황금새벽당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폭력 사건이 수사 하루 만에 32건이나 나오기도 했다.

파시즘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더 큰 이유는 파시즘이 성장할 환경이 여전히 존

재하기 때문이다.

극심한 경제 위기, 공식 실업률은 거의 30퍼센트고 청년 실업률은 60퍼센트에 육박하는 절망적 상황, 대안을 내놓기는 커녕 진축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환멸이 파시즘이 자라나는 환경이다.

바로 이런 조건에서 그리스뿐 아니라 유럽 곳곳에서 파시즘이 성장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프랑스의 파시스트 정당 국민전선이 정당 지지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조건은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지적했듯이 자본주의 자체에서

비롯했다.

따라서 황금새벽당이 불법화되더라도 파시즘은 다른 형태로 되살아날 수 있다.

파시즘을 뿌리 뽑으려면 팔레스타인 출신 영국 마르크스주의자 토니 클리프가 지적했듯이 파시즘이 자라나는 토대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

“우리의 반파시즘 투쟁 전술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쥐를 공격하는 동시에 쥐가 번식하는 하수구를 청소하는 것이다. 파시스트들만 공격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실업과 저임금 등 파시즘이 성장하기 좋은 토양을 제거하는 사회적 박탈에 맞서 싸우는 것도 필요하다.”

이집트

다시 커지기 시작한 반군부 시위

김종환

이집트 군부는 7~8월 수 차례에 걸쳐 무슬림형제단 지지자들이 주를 이룬 시위대를 수천 명 학살하고, 9월 말에는 법원을 통해 무슬림형제단의 모든 활동을 금지했다. 그러나 무슬림형제단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반군부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단 한 번의 진압 작전으로 1천 명가량 살해당한 8월 14일 이후, 시위 규모는 급격히 줄었지만 9월 새 학기 등을 맞아 시위 규모는 조금씩 커지고 있다. 군부의 잔인한 진압도 계속돼 10월 6일 반군부 시위에서는 50명 이상 사망했고, 2백 명 이상 부상당했다.

무슬림형제단은 혁명으로 2011년 독재자 무바라크가 쫓겨나자 지배계급(특히 군부)과 손잡고 정부를 구성한 후 혁명의 요구를 배반했다. 그래도 이집트인들의 혁명 요구가 전혀 사그라지지 않자 무슬림형제단은 지배계급한테 버림받았다.

군부는 7월 초 무슬림형제단 출신 대통령 무르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고 정치 권력을 잡았다. 이어서 무슬림형제단을 '혁명을 파괴하려는 테러 단체'라 부르며 학살과 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빵, 자유, 사회 정의” 같은 이집트 혁명의 진정한 요구가 제기되지

못하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무슬림형제단은 테러 단체가 아니다. 비록 이집트 군부와 주류 언론은 모든 ‘테러’ 뒤에 그들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말이다.

이집트에서 벌어지는 ‘테러’는 대부분 시나이 반도에서 일어난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맞닿은 곳으로, 이집트 정부가 미국 제국주의에 굴종한 이래 수십 년 동안 그에 대항하는 무장투쟁이 진행 중이다.

테러 집단

무슬림형제단 정부 역시 지난해 이스라엘과 함께 이 지역 무장세력을 대대적으로 토벌하기도 했다. 주류 언론은 ‘이슬람주의’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이들과 무슬림형제단을 구분하지 않고 ‘이슬람주의는 테러 세력’라는 식의 편견을 부추기고 있다.

무슬림형제단은 이집트에서 대중적 기반이 가장 넓은 개혁주의적 세력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들은 전국의 사원들을 중심으로 가난한 이집트인들에게 구호 활동을 펼치며 기반을 다져 왔다. 그들의 개혁주의적 대안은 아직 사회주의 혁명으로써까지 나아가지 못한 대중의 불균등한 의식과 맞아 떨어진다. 따라서 군부의 연이은 학살과 마녀사냥

에도 불구하고 무슬림형제단의 영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비록 무르시 정권 시기 배신적 행태는 그들의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지만 말이다.

이집트 혁명을 진정 위협하고 있는 세력은 바로 군부다. 이들은 1952년 건국 이후 권력을 한시도 놓지 않았다. 혁명에 떠밀려 정부를 무슬림형제단에 내어줄 때도 그들은 막후에서 실권을 휘둘렀다. 군부는 이집트 최대 자본가 집단으로 혁명을 가장 혐오하는 세력이다.

또한 군부는 미국 제국주의의 핵심 파트너로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친미 반동 국가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정치적 지지뿐 아니라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돈을 제공하며 군부의 지배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선출된 민간 정부를 요구하며 일부 지원을 유보한 것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집트에서 혁명가들은 군부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에 맞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또한 혁명가들의 정치적 요구와 노동자 운동의 경제적 요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무슬림형제단 마녀사냥에도 맞서야 한다.

그럴 때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마락을 드러내는 군부에 맞선 투쟁이 폭발하는 시기를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상) 산속 공사장 밑에서 농성 중인 할머니들.
(중) 스티로폼 위에서 공사장 이슬 맞으며 진행한 단식농성(이후 병원에 실려감)
(하) 공사장 자재를 나르는 헬기장을 지키는 한전 직원과 경찰 들.

밀양 사진 르포

진짜 ‘외부세력’은 누구인가

이윤선

농번기에 한전과 경찰에 의해 시달려야 했던 밀양 주민들은 이번에는 수확기에 몹쓸 불청객들과 또 마주쳐야 했다. 그동안에 조용한 날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농성장을 지키느라 추석에는 손주들을 만나야 했을 할머니·할아버지는 농성장 침탈을 두려워 하여 그곳에서 합동 차례를 지내야 했다.

행정대집행이 예고된 이른 새벽, 평발마을의 할머니·할아버지들은 농성장 움막에서 곱은 잠을 자고 일어나 콩나물국에 밥을 주섬주섬 넘긴다. 빠르게 식사를 마친 후, 노인들은 움막 기둥에 매어 있는 쇠사슬을 자신의 목에 건다. 다른 이들은 농성장 안에 크게 파놓은 무덤 모양의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 쇠사슬을 서로의 몸에 엮는다. 그들의 허리에는 마치 등산장비처럼 쇠사슬을 뿔 수 있는 복대가 매어 있었다. 경찰이 농성장을 침탈한 후이라도 연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를 끝까지 저지하려는 그들의 공여지책이었다.

경찰이 농성장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새벽부터 자신의 목과 허리에 차가운 사슬로, 서로를 묶어 놔야만 했다.‘차라리 확한판 불고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야전사령관’ 할머니의 말처럼, 이들에게는 언제 경찰과 한전이 자신들이 느슨해지는 틈

을 이용해 다시 농성장을 부수고 공사를 시작할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었고, 이 상황은 몇 년째 계속되었던 것이다.

평발마을을 근처 126번 공사장 앞에서는 경찰이 노숙을 하는 노인들의 침구류를 뺏거나, 화재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소화기를 온 아침식사에 뿌려 버리는 일도 있었다. 또, 한전 직원들이 지나갈 때마다 경찰은 그들을 비호하며, 항의하는 노인들을 제지하고 있었다.

행정대집행이 실제로 시작되었던 4공구 헬기장 앞에서는 용역들이 농성장을 부수려고 하고, 경찰이 이를 막는 노인들과 단체들을 힘으로 몰아 붙이는 과정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노인들은 헬기장 앞 도로에 누워서 항의를 하기도 했고, 공사가 시작된 구역으로 자재를 나르는 헬기를 보면서 쓰러지는 노인도 있었다. 모두들 헬기가 뜰 때마다 발을 뚫뚫 굴러야만 했다.

누가 권력이 없고 나이 든 사람들이 수가 없어 몸에 쇠사슬을 동여매는 것을 보고 ‘넘비’라고 하는가. 누가 자신의 고향에는 위험한 송전선을 깔지 말아달라는 사람들에게 ‘대승적인 양보’를 강요하는가. 누가 송전량이 충분한데도 송전선을 더 놓아 핵발전소 건설을 정당화하고 있는가. 평생을 국가 폭력조차 모르고 살아온 밀양 주민들에게 진짜 ‘외부세력’은 누구인가.



탄압 속에서 지속되는 이집트 반군부 시위대 군부는 무슬림형제단 지지자들을 학살하며 반혁명을 밀어붙인다. 10월 6일 카이로.

무르시 지지자들의 반군부 시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몇 달 전만 해도 군부의 파트너였던 무슬림형제단은 지금 현재 군부에 맞서 싸우는 주요 세력이 돼 있다.

군부 쿠데타 직후 이들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자신들이야말로 정통성을 가지며, 자신들을 쫓아낸 군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혁명을 배신한 결과 지배계급뿐 아니라 민중도 그들을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도 무슬림형제단 지도부는 이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지만, 8월 대규모 학살이 벌어지고 9월에 대학 개강 이후 무슬림형제단 청년들의 활동이 본격화하자 강조점이 바뀌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무르시 사진 대신에 학살당한 시위대 사진을 더 강조하고, 무르시 복귀 요

구보다는 군부 지배가 무바라크 체제를 불러 들일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주장을 손질’(〈AP통신〉)한 것이다. 군부의 탄압 앞에서 고립을 탈피하고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교육지책이기도 할 것이다.

카이로 대학의 무슬림형제단 활동가는 “우리는 대통령 [무르시] 복귀를 외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공동의 적을 마주하고 있고, [혁명]이 처음 시작된 2011년 1월 25일의 정신을 되살리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황에서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 4월6일청년운동 등 혁명 세력이 ‘혁명적 전선’을 결성하면서 군부와 무슬림형제단 반대를 같은 비중으로 나란히 내건 것은 아쉽다.

앞서 이집트의 혁명적사회주의자단

체(RS)는 무슬림형제단이 혁명을 배신해서 민중한테서 버림받았다고 옳게 규정하면서도 “양쪽[군부와 무슬림형제단]을 대등하게 대하는 태도는 주저하고 망설이는 결과만을 낳을 것”하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주적은 국가”라면서 군부가 이끄는 국가에 타협한 활동가들과 나세르주의자 등을 비판했다.

이런 입장에서 따라 무르시 정권 복귀 등의 주장에서는 무슬림형제단 지지자들과 독립적인 주장을 견지하면서도 무슬림형제단 청년들의 움직임에 호응해 군부에 맞선 시위에서는 함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슬림형제단의 한계를 들춰내고 그 기층 활동가들을 혁명적 주장으로 끌어 당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진 출처 Mossab Eshamy (블리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개혁주의는 왜 개혁에서도 한계를 드러내는가

근래 마녀사냥 국면에서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한계를 드러내며 민주적 기본권도 일관되게 방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회를 이상적, 도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미국 광우병 쇠고기, 한미FTA, 강정마을 해군기지 등은 ... [구시대적인] 반미민주주의 프레임”(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 등의 주장도 했다.

이런 한계는 개혁주의의 논리와 전략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개혁주의는 문제가 있는 체제를 그대로 두고도 국가 등 자본주의의 기구를 이용해 체제가 낳는 모순과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사상이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의회를 ‘공정한’ 정책을 입안하고 지배자들을 설득해 개혁 과제를 달성할 매우 중요한 통로로 본다. 현실 가능한 정책들을 제시하며 선거에서 지지를 얻고 의석을 늘려나가야지 ‘과격한 이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개혁주의의 주요한 물질적 기반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타협과 중재를 맡아 하는 노동조합 상근 간부층에 있다는 것과도 관련 있다.

개혁주의의 이런 주장은 국가 기구를 제대로 운영하기만 하면 계급을 초월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마르크스는 이런 견해를 낱알이 반박했다. 마르크스는 국가는 대중 ‘전체’를 대표하기는커녕 언제나 한 계급이 다른 계급들을 지배할 수 있게 해 주는 도구 노릇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르주아지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은 “부르주아지 전체의 공동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본주의에서 진정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이나 의원들에게 있지 않다. 주요 행정기구들, 사법부, 경제의 핵심 부분들, 언론의 대부분, 군대와 경찰 같은 진정한 권력 기구는 선출되지 않은 자들의 손에 있다. 하층민 출신 인사가 어렵게 이 안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권력 기구를 거스르기 힘들다.

우리 삶에 **진정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치**



진정한 권력을 가진 이런 자들에 맞서 개혁을 이루려면 ‘한법’과 제도 내에 머무르려 해선 안 된다.

개혁주의자들은 자본가들이 받아들일 만한 타협책을 만들려 고심한다. 그러나 병폐를 낳는 원인(체제)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결과만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한계에 부딪힌다.

는 결정들은 대부분 이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 내린다. 무기 수입, 민영화 계획, 복지제도 축소 등 중요한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과정 또한 민주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설령 의회가 이들을 거슬러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사법부는 그 법을 자본가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해 준다. 자본가들은 투자 중단, 자본 도피, 환투기 공격 같은 방법으로 거의 항상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고, 때에 따라 군부 쿠데타 같은 더 ‘과격’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타협

개혁주의자들은 제도권 내에서 점진적 개혁을 통해 체제의 병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개혁주의자들은 자본가들이 받아들일 만한 타협책을 만들려 고심한다.

그러나 이처럼 병폐를 낳는 원인(체제)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결과만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한계에 부딪힌다.

예컨대, 노동계급의 빈곤 상태를 해소하려면 노동자·민중이 의료·교육·주택 등 필수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가가 복지 서비스를 대규모로 제공해야 하는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유층에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 복지가 확장되는 만큼 시장도 줄어들게 된다. 이는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를 제약한다.

개혁주의 전략의 한계는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 더욱 두드러진다. 불황으로 이윤이 줄어들수록 자본가들은 노동계급의 희생을 발판으로 자신의 특권을 지키려 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민주주의 권리도 쉽사리 ‘보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체제 내에 안주하려는 개혁주의자들은 개혁마저도 일관되

게 추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의 사회주의자 로자 룩셈부르크는 개혁주의자들의 전략을 “사회주의자가 부르주아 국가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국가에 정복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현 체제의 개혁과 민주적 기본권을 위해 싸울 때조차 **강력한 계급투쟁으로 ‘인간보다 이윤’이라는 지배자들의 우선순위 자체에 도전하는 것**을 근본에 뒀야 한다.

이런 투쟁으로 우리는 민주적 기본권뿐 아니라 과거 투쟁으로 쟁취한 모든 성과를 방어해야 한다. 복지를 확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국가를 압박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투쟁에 앞장서고 개혁주의자들과 함께하면서도, 왜 혁명적 입장과 대안이 필요한지를 주장하고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김준호

마녀사냥에 반대하는 성소수자의 목소리

“혐오가 판치는 세상에는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다음은 **광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 (사진)이 10월 5일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14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 한 발언을 다듬어 보내온 것이다.

저는 공안탄압에 반대하는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러 나왔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의원들 모두 커밍아웃하라고 협박하더군요. 소위 ‘종북’이라는 것을, ‘빨갱이’라는 것을, 공안탄압에 반대한다는 것을, 그리고 ‘동성애자’라는 것을 커밍아웃하라고 강요하는 사회라면, 그게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기는 한 사회입니까?

성소수자인 저는 이 공안탄압 정국에서 분노와 두려움을 함께 느낍니다.

분노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마녀사냥을 통해 ‘종북’이라는 적을 만들어 놓고



는, 한편으로 자신의 복지공약을 한 방에 뒤집고도 멀쩡하니 말입니다. 마녀가 재판 받는 동안, 부자들은 세금을 탕감받을 것이고, 복지는 후퇴할 것입니다. 민영화는 가속화하고, 전교조는 다시금 법외노조가 돼 탄압의 다음 희생양이 될 것

입니다. 이런 공포 정치 아래서 저항은 더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동성애자들에게 가해진 낙인이 ‘종북’으로 몰린 통합진보당에 똑같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든 ‘간첩’의 붉은 글씨가 새겨져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당할 때, 이 사회는 더욱 쉽게 혐오와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마녀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혐오를 만듭니다. 마녀는 언어 맞아도 마땅하다고 말하는 국가가 있을 때 폭력은 더해집니다. 지금 이 상황이 러시아와 아프리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동성애 혐오 범죄와 무엇이 다르니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한 2007년부터 ‘친북 빨갱이’들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저들의 주장을 지겹도록 들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면 ‘종북계’입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고 차별

에 반대하는 자가 ‘종북계’라면 저도 끼여 ‘종북계’이 하겠습니다.

적대와 폭력

저들은 ‘친북 빨갱이’가 균형법 92조의 동성애자 처벌조항 폐지를 지지하는 것도 비난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동성애 처벌조항을 두고 동성애가 군 기강을 무너뜨려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동성애자가 자기결정권을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옹호하겠습니까?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혐오’를 조장하는 사회에서 편견의 대상이 되고 낙인찍힌 사람들, 지배적 사상에 반대하는 사람들, 부당하게 빼앗긴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 모두가 ‘종북’이 되고 있습니다.

저들은 동성애가 건강한 사회를 위협한다고 공격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미국의

매카시즘 시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적으로 동성애자와 공산주의자를 규정하고는, 공산주의자가 동성애자와 내통해 국가 전복을 꾀하고 있다며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동성애자들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 모든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관용마저 실종됐고, 여성은 다시금 집 안에 갇혀야 했으며, 성적 보수주의와 가족주의가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은 성소수자들에게 너무나 위협적입니다. 마녀가 있는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혐오가 판치는 세상에는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적대와 폭력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진보도 숨 쉴 수 없습니다. ‘종북’ 낙인에 반대합니다. 혐오를 멈춰야 합니다. 연대합니다.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함께 투쟁합니다.

‘종편’ 출연도 자유로운 선택일 뿐인가

얼마 전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JTBC 보도 담당 사장이 된 손석희의 인터뷰가 <한겨레>에 실렸다. 누군가는 1992년 MBC 파업 때 앞장섰다가 구속돼 손이 묶인 채 파란 수의를 입은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씁쓸했을 것이다.

손석희뿐 아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종편에 안 나간 게 원인이라며 종편 출연 거부 당론을 펴기했다. 진중권 같은 진보 인사들이 종편에서 강용석, 조순형 같은 우익과 웃고 떠드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보수독점적 언론 구도, 여론 다양성 훼손 등의 …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 비판을 달게 받겠다”는 손석희는 과연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있을까?

분명 손석희가 JTBC <뉴스9>의 앵커가 된 후 삼성 백혈병 피해자들의 소식이나 밀양 송전탑 문제 등이 보도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종편이 ‘합리적 보수’로 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종편만 문제가 아니다?

물론 최근 ‘공영’방송이라는 KBS, MBC도 정부의 스피커 구실이나 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종편만 문제나 하는 제기는 분명 타당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종편의 DNA에 새겨진 태생적 한계를 보지 않는 것이다. 종편은 이 사회 지배계급과 1퍼센트 재벌들의 대변인이 되고자 태어난 언론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은 언론노조와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억누르고 날치기로 언론악법을 통과시켰다.

손석희는 “삼성은 JTBC에 지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등은 하도급업체 십여 곳을 통해 JTBC를 포함한 종편에 1백69억 원 규모의 출자 계획을 약속



종편은 최소한의 규제도 받지 않는 재벌들의 선전 도구다. 2008년 12월 30일 언론노조 파업 집회.

했다. 최근 정부는 또다시 종편에게 유리한 전송 방식 등 특혜를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종편이 누구 입에 달린 혀바닥인지 보여 준다.

일각의 제기처럼, TV조선·채널A와 JTBC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JTBC도 이명박 정권 때

4대강을 찬양했고, 이번 대선 때도 박근혜 띄우기에 열을 올렸다. TV조선의 ‘미친 존재감’ 때문에 JTBC의 우파적 본색이 덜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말이다.

손석희가 진행하는 <뉴스9>에서 약간만 눈을 돌려도 JTBC에서 방영되는 수많은 프로그램은 성희롱, 추문

등으로 정치 인생이 위기에 몰린 골통 우파들의 ‘이미지 세탁소’로 쓰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도 ‘종북’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출현시켜 ‘종북 마녀사냥’에도 힘을 보탰다.

일부 사람들은 종편도 언론이니 그들에게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 보수 인사들과 심지어 자유주의자들도 이런 논리로 ‘종편 출연 거부’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조차 모르는 소치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언론의 자유란 그 자체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마르크스는 언론의 자유를 민주적 권리를 이루기 위한 더 넓은 투쟁의 일부로 봤다. 즉, 영리를 추구하거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쓰일 ‘언론의 자유’는 옹호할 수 없다.

TV조선의 앵커는 “종북세력 머리를 좀 쪼개서 해부[하고 싶다]”라는 말을 뉴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며 역사를 왜곡하기도 한다.

이런 막말, 왜곡, 허위사실 공표 때문에 종편 4사는 출범 이후 총 1백50건의 제재를 받았다. 기계적 중립은커녕 사실에도 관심이 없는 것이 종편의 본질이다.

그렇기에 일부 진보 인사들의 종편행은 오히려 종편의 친기업적·우익적 본질에 ‘중립’이라는 분칠을 해주는 효과를 낸다. 손석희 영입 후 JTBC에 젊은 사람들의 시청률이 높아진 것도 이런 효과의 일환이다.

따라서 종편행이라는 ‘개인의 선택’을 비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왜냐면 민중을 공격하는 언론에 협조하는 것은 스스로 ‘양두구육’의 양머리가 되는 꼴이기 때문이다.

양효영

현대차 비정규직 20억 손배 판결

정당한 투쟁을 돈으로 억누르려는 악랄한 시도

10월 10일 울산지법은 2010년 11월 점거 파업을 이유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10명과 파업에 연대한 정규직 활동가 엄길정 동지에게 현대차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점거 파업이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2010년 11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대차 울산 1공장 점거 파업은 대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한 정당한 투쟁이었다. 이 투쟁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설움을 대변하는 투쟁이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10년 넘게



2010년 11월 파업 당시 이 멋진 광경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지배자들.

불법 파견으로 이득을 챙기고 있는 현대차 사측이야말로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집단이다.

그런데도 울산지법은 버젓이 벌여

지고 있는 불법은 눈 감아 주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에 철퇴를 가했다. 그야말로 “반사회적” 판결이다.

9월에도 울산지법은 올해 초 특근

거부 투쟁을 주도한 정규직 활동가 엄길정·박성락 두 동지에게 3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었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현대차 노조를 “두드려 잡[아야]”한다는 막말로 서슴지 않았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칼 끝이 잘 조직돼 있는 현대차 노조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돈으로 압박해서 노동자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공격에 맞서 현대차 정규직 노조와 활동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이다. 이를 지지하고 연대하자.

김지태

한대련과 반값등록금 투쟁에 대한 보복·탄압 중단하라

검찰은 지난해 반값등록금 집회 참가자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주최 집회 참가자들을 기소하며 탄압하고 있다.

국정원이 나서서 한대련 활동을 사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검찰까지

한대련 탄압을 거드는 것이다. 검찰이 ‘불법 시위’라고 규정한 한대련 주최의 집회들은 반값등록금 시행,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정당한 투쟁이었다.

저들은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 고

지서가 아니라 벌금 폭탄 고지서를 날리고 있다.

지금 한대련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벌금형 기소는 단지 한대련에 대한 공격만이 아니다. 한대련이 동참한 반값등록금 운동과 국정원 규탄

촛불 운동 등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다.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에 이어 한대련까지 마녀사냥하고 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이아혜

홍근수 목사님의 삶과 투쟁을 돌아보며

이 글은 10월 7일에 별세하신 고(故) 홍근수 목사님(사진)을 추도하며 노동자연대다함께가 10월 8일 발표한 성명이다.

10월 7일 별세한 홍근수 목사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사회 진보를 위한 투쟁, 반제국주의를 위한 투쟁 등에서 큰 기여를 한 분이였다.

고인은 박정희기독교반대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 상임대표, 불평등한 소파(SOFA) 개정 국민행동 공동대표, 매항리폭격장 폐쇄투쟁 범국민대책위 공동의장, MD저지 공대위 공동대표, 효순미선 범대위 상임공동대표, 전국민중연대 상임공동대표, 평택미군기지 범대위 상임공동대표 등을 맡아서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고인은 1988년 KBS ‘심야토론’에서 “유럽 나라들처럼 공산당을 합법화시켜야 비로소 민주주의 사회”라고 용기있게 말한 바 있다. 이런 발언들이 문제가 돼서 1년 넘게 국가보안법으로 투옥되기까지 했지만 고인은 굴하지 않았다.

특히 고인은 1994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결성해서 반제국주의와 평화를 위한 투쟁에 큰 발걸음을 남겼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지금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에 맞선 투쟁에 앞장서며 반전평화를 위한 운동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고인이 건강 악화와 지병으로 너무 일찍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우리 곁을 떠난 것은 큰 아픔이 아닐 수 없다.

모두의 귀감

노동자연대다함께는 고인과 관련해서 각별한 기억을 갖고 있다. 고인은 이미 1990년 말부터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는 국제사회주의자들을 누구보다 앞장서 방어했다. ‘정견의 차이’를 떠나서 전체 운동의 발전을 위해 단결해서 탄압에 맞서야 한다’는 고인의 자세는 모두의 귀감이 될 만했다.

이런 소중한 인연은 이후에 반전 운동 등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반전 운동 등에서 노동자연대다함께는 고인과 함께할 수 있었다.

이런 투쟁 속에서 우리는 억압받는 민중의 편에서 제국주의의 아만과 위선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고인의 찌렁찌렁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고인은 이런 운동에 보탬이 될 만한 어떠한 제안도 좀체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고인은 진보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정권의 배신에 대한 비판을 주저할 때도 거침없이 김대중 퇴진을 주장했다.

개혁 염원을 배반하고 이라크에 파병한 노무현 정권에 대한 고인의 비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노무현 정권 초기에 송두율 교수가 마녀사냥당할 때도 고인의 태도는 돋보였다. 송두율 교수의 ‘북한 노동당 가입’ 사실이 드러나 많은 진보 인사가 등을 돌릴 때도 고인은 ‘그게 뭐가 문제냐’며 곳곳하게 송두율 교수를 방어했다.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주장과 실천에 대해서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던 고인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린다.



통일민주주의연대위원장 홍근수 목사님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10월 23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티브로드 비정규직 파업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원청을 압박해 승리한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단호한 점거 투쟁과 연대로 승리하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 34일 만에 인상적인 승리를 거뒀다.

노동자들은 노조 탄압으로 악명 높은 원청 태광그룹을 상대로 싸워, 평균 23퍼센트(45만 원)의 높은 임금 인상을 따냈다! 월 10시간 이상 노동시간도 단축시켰고, 노조 교육시간, 사무실, 전임자 등 노조 활동도 보장받았다.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던 태광 측을 직접 교섭에 끌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번 투쟁은 ‘진짜 사장’의 책임을 감추고 노동자들을 열악한 처지로 내모는 위장도급 문제를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구실을 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와 단체들이 티브로드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며, 이들을 주목했다.

무엇보다 티브로드 파업은 열악한 처우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투쟁을 통해 처우를 개선

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노동자들은 한 달 넘는 파업 기간 동안 단단하게 대열을 유지했고, 과감하게 본사 점거 농성까지 돌입하며 원청을 직접 압박했다.

안 그래도 그룹 전 회장 모자가 횡령 혐의로 구속되고 지금도 각종 비리 논란에 휩싸인 태광그룹 측은 이런 노동자들의 저항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위장도급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라난 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티브로드 대표 이상윤은 “케이블 업계 최고 수준의 근로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업계 최고

앞서 동종업계 씨엔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도 이번 투쟁에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 티브로드 노동자들은 씨엔엠 투쟁에 자극을 받아 올 초 노조를 결성하며 싸우기 시작했고, 씨엔엠 노동자들이 거둔 성과(임금 32만 원 인상

등)에서 출발해 더 높은 임금 인상도 따낼 수 있었다.

요컨대, 티브로드 노동자들의 투쟁과 승리는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가 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잠재력을 보여 줬다.

최근 몇 년간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상적인 조직화와 투쟁의 가능성을 보여 주며 노동계급 전체에 자신감을 주는 구실을 했는데, 티브로드 파업도 이런 투쟁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지사장’들의 횡포와 원청의 외면 속에서 분노를 폭발시키며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금 삼성전자서비스 등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티브로드 파업의 승리에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원청 사용자의 양보를 끌어냈던 것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병규·조명지

인천대 ‘법인화’ 이후

폐해가 드러나며 불만이 끓어 오르고 있다

“지역 거점 국립대로의 성장”

올해부터 법인으로 전환한 인천대 당국이 내세우는 슬로건이지만 현재 인천대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인천대는 올해 등록금을 0.5퍼센트 인하했다. 지난해 시립대였을 때 5퍼센트 인하했는데 말이다. 현재 인천대의 등록금은 전체 국공립대 평균(2백 61만 9천3백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국공립대 4위다. 반면 장학금 수혜율은 전국 국공립대학 48개 중 41위다.

인천시는 2010년 인천전문대와의 캠퍼스 통합과 법인대학으로 전환시 약속한 9천2백34억 원을 주지 않았다. 캠퍼스 통합으로 정원이 4천 명이 늘었지만 약속한 부지도 제공하지 않아 캠퍼스는 좁아 터진다. 그리고 이제는 ‘국립’이 됐으니 입 싹 씻고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2006년 체결한 양해각서를 빌미로 앞으로 5년 동안은 인천대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인천대는 인천시에게서 받는 3백억 원(이것마저 12개월 할부로 주고 있다)과 인천대가 빚진 2백억 원으로 겨우 운영되고 있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국립대인 공주대가 7백억 원으로 운영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국가가 지원한 돈은 인천대의 빚 2백억 원에 대한 이자 9억 원이 전부다. 내년에 책정된 지원액도 같은 국립법인대학인 서울대의 1퍼센트에 불과하다. 명백한 차별이다.

재정 위기의 고통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맘 놓고 공부하거나 편안히 쉴 공간조차 없다. 심지어 조금만 늦어도 서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진다. 연습실, 학생회실, 동아리실조차 제대로 없고 학생 식당이 부족해 밥 먹는 것이 불편할 정도다.

수업권조차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인천대의 전임교원확보율은

전체 국공립대 꼴찌다(전체 대학 평균 79퍼센트, 인천대는 32퍼센트). 들을 만한 수업도 별로 없거니와 듣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듣는다.

게다가 제물포 캠퍼스 학생들은 같은 등록금을 내고도 폐허나 다름없는 캠퍼스에서 3년째 다니고 있다.

차별

다행히 올해 초부터 8개월 동안 학생들이 학교 당국에 끈질기게 요구한 결과, 2백 석 규모의 학생식당과 대형 휴게실, 스터디룸, 일부 단과대실을 2015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여전히 기숙사 부족 문제와 제물포 캠퍼스 학생들에 대한 차별은 남아 있다.

법인화 이후 직원들의 신분도 불안해졌다. 많은 교양 강의를 초빙교원(40.6퍼센트)과 시간강사(43.9퍼센트)로 채우고 있어 고용불안이 심각하다.

학교 당국은 ‘국비지원이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을 운운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진정한 책임은 지난해 학생과 노동자들의 ‘법인화 추진 유보’ 요구를 무시하고 법인화를 강행한 학교 당국과,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국가와 인천시에 있다.

인천대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편의 일환인 법인화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총장 직선제 폐지와 독단적인 법인 이사회 구조로 학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대학을 법인이사회 소유로 만들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국가와 인천시가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또 학생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법인화를 강행하고, 그 책임을 학생·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학교 당국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인천대를 제대로 ‘국립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박한솔 인천대학교 학생

보라매병원 민들레문화 파업 승리

근무복까지 집에서 빨아야 했던 설움을 끝장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보라매민들레문화회(이하 보라매민들레문화회)의 청소·환자이송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정년 연장, 유급휴일 보장, 근무복 세탁 등을 요구하며 9월 11일 파업에 돌입해 18일 만에 완전히 승리했다.

보라매병원 하청업체인 두잉씨엔애스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인 월 1백20만 원 정도의 저임금을 강요해 왔다.

남들이 다 쉬는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주사 바늘에 찔리거나 감염에 노출되기도 하고, 각종 병원균 감염 우려가 있는 근무복도 집에서 빨아야 했다.

게다가 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년이 70세고, 서울시 산하기관 청소 노동자들도 정년이 65세인데 반해, 보라매민들레문화 노동자들의 정년은 60세밖에 안 됐다.

보라매민들레문화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두잉씨엔애스는 바로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하려고 했다.



9월 10일 보라매병원 병원장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보라매민들레문화 노동자들.

그러나 노동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서울시 향의 방면, 하청업체 타 사업장 집회 참가, 서울대병원문화 대의원들과 함께 병원장실 점거농성을 하는 등 단호한 투쟁을 벌였다.

결국 두잉씨엔애스는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만 했다. 박근혜 정부가 마녀사냥을 하고 노동운동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소식이다.

고은이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강동훈 외 지음, 노동자연대다함께, 134쪽, 4,000원

《마르크스주의의 방법 — 소외, 변증법, 역사유물론》

최일봉 지음, 노동자연대다함께, 72쪽, 3,000원

※ 구입 문의 : 전화 02-2271-2395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Report@left21.com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 논란

노동자·학생 이간질에 휘말리지 말아야

7월 5일 교육부 감사 결과, 사립대학 39곳이 교직원 임금을 납부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하 개인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등 총 1천8백60억 원을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에서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뤄진 교비회계에서 개인부담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두고 문제 제기가 많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부가 이를 빌미로 재정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해서, 대학 40여 곳이 노동자들에게 이 돈을 ‘반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려대에서는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받았다고 해 놓고, 기부금을 내지 않은 직원들에게 급여에서 개인부담금을 강제로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동덕여대, 영남대, 단국대 등도 개인부담금을 노동자들에게서 환수했다.

많은 대학들이 관행으로 지급해 온 것을 정부가 갑자기 문제 삼는 의도는 매우 의심스럽다. 박근혜는 7월 8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높은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등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등록금으로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교육비에 대한 정부와 재단의 책임은 회피한 채, 대학 노동자와 학생을 이간하려는 의도를 보여 준다.

그러나 교비회계에서 교직원들의 개인부담금을 지급한 것은 결코 노동자들의 잘못이 아니다. 한신대나 고

려대 등 적잖은 사립대 재단들은 수년 동안 교직원 임금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노동자들의 개인부담금을 지급해 왔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 ‘대납’이 아니라 노동자 임금의 일부다. 심지어 판례에도 ‘단체협약에 의한 개인연금보험을 사용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 것은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돼 있다. 사립재단들이 마땅히 줘야 할 임금을 자신들의 돈이 아니라, 교비회계로 준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탐욕을 부려 온 사립재단과 이들을 방치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교비회계에서 납부한 개인부담금을 노동자들에게서 강탈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고, 적립금이나 법인 특별대출금을 학생들의 등록금 인화에 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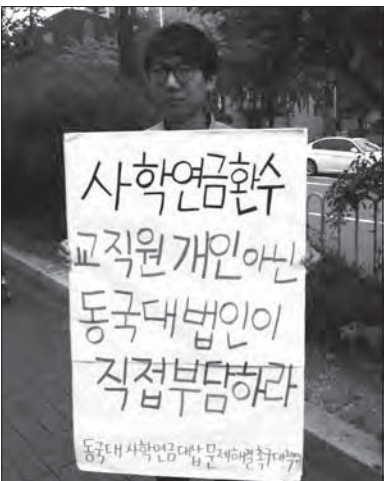
그런데 일부 진보진영이나 학생들이 이 정점을 두고 다소 부적절한 입장을 취하거나 학교와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것은 아쉽다. 이는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논리와 이간질에 취약할 수 있다.

인하대 등 몇몇 총학생회들은 구체적인 환수 방안을 말하지 않고 “교직원 연금 환수”를 주장하고 있다. 또 대학 교육연구소가 7월 9일에 낸 입장을 보면, 노조가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식의 진술과 재단과 함께 교직원 노조를 비난하는 부적절한 내용도 있다.

한대련도 자료집에서 “대학으로서 는 등록금을 내리거나 … 교내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보다 교직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며 학생 복지와 교직원 편의를 대립시키는 듯 말했다. 교육부의 연금 환수 방침을 비판하지 않은 것도 아쉽다.

최근 기성회비 반환 판결 이후 대학 노조, 공무원 노조, 한대련 등이 단결해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기성회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에서도 노동자와 학생이 단결할 수 있는 요구를 제시하고 함께 싸워야 한다.

이아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활동가



사학연금환수 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대병원

적자 책임 떠넘기기에 맞서는 노동자들

서울대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며 노동자들에게 임금동결과 인력감축을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비상경영을 이유로 품질이 나쁜 싸구려 의료기기를 사용해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다고 한다.

이미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주5일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토요일 진료는 점점 늘었고, 야간 수술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65퍼센트나 증가했다. 간호사 1인당 12~18명의 환자를 돌보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다는 게 노동자들의 불만이다.

지난 3년 동안 고액 연봉을 받는 의사는 3백20명이나 늘리면서 정작 현장에 필요한 필수인력은 채용하지 않거나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

미 서울대병원 비정규직은 1천 명이 넘는다.

병원이 정말로 적자인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적자가 생겼다고 해도 그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암병원·심혈관센터 신증축, 비원호텔 인수 등 무리한 증설과 역대 의사 성과급 지급으로 생긴 적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10월 8일 조정 신청 보고대회를 했다. 이 보고대회에 조합원 3백여 명이 참가해 결의를 다졌다.

노동자들은 공공의료 확보,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인상,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얼마 전 보라매병원 민들레분회(청소·환자이송) 투쟁 승리 소식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고은이

독자토론광장

Letter@left21.com

10월 23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는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이 사상의 자유 문제가 아닌가?

최근에 내가 노동자연대다함께 회원들과 토론한 내용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얼마 전 나는 한 지인에게서 ‘국정원의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공격이 국면 전환이라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했다는 점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진보당을 방어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을 들었다. ‘낙취록에 따르면, 주체사상을 토론한 것이 아니라 유류시설 공격·전신국 파괴 등을 모의했는데 이를 사상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다.

이런 물음에 대해 많은 동지들은 이렇게 답했다. 우선 사상을 학문적인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협소한 관점이다. 사상은 단순히 “생각”을 뜻하기도 한다. 또 당시 토론에 참여한 진보당원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를 가정해 전략과 전술을 논의한 것이다.

그들의 친북적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진정한 ‘사상의 자유’는 혐오받는 사상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들의 사상은 탄압받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논쟁돼야 할 대상이다.

그러자 꼬리를 물고 질문이 이어졌다. 진보당 내부 토론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도 형법으로 처벌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는가? 국회의원에게 그러한 사상의 자유를 허용해도 되는가? 이에 대해 다른 동지들과 토론해 정리한 내 생각은 이렇다.

처벌

형법 자체가 친북적이거나 체제에 반대하는 생각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혹 강도짓을 모의한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생각일 뿐이다. 누구나 나쁜 생각이나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



사진 출처: 진보당당원

진보당 마녀사냥을 고리 삼아 확대되는 탄압에 연대해 맞서자.

처벌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정의당은 ‘헌법 내 진보’를 얘기하지만, 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는 형법으로 무력해지는 조항이 아니다.

또 이 사회의 진보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체제에 맞서는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악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보를 바랄 수 없다. 국회의원이 체제 위협적인 사상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은, 이 사회의 변혁을 바라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고, 이 체제를 수호하고 체제 내 약간의 진보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당내 민주주의를 해쳤고 진보의 분열에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진보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다. 진보가 그들을 잘라내야 건강한 진보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진보당이 아닌 진보진영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땐 별개로 방어하면 된다고 보는 관점도 있었다.

물론 나는 진보당이 저지른 잘못된 행

태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것 역시 진보 내에서 논쟁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국가 기관의 탄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진보당 공격이 성공해서 국정원이 힘을 얻고 다른 진보를 공격할 것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피해의식이 아니다. 이미 박근혜는 철도노조 내 의견그룹인 한길자 주회를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했고, 전교조를 법외노조화로 탄압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하기 위해 무릎을 파고 올라 미를 건 것이 진보당이 한 것이라고 왜곡 보도하고 있다.

박근혜는 운동의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면서 진보진영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을 벌이려 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여러 탄압이 연결된 것임을 이해하고, 연대해 싸워야 한다. 진보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세력이나 내주자는 주장은 진보진영이 분열하고 반격할 힘을 잃게 만들 것이다.

김샘

감옥에서 온 편지

진실을 위해 투쟁하는 <레프트21>이 반가웠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헌신하시는 <레프트21> 동지들과 노동자연대다함께 동지들!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뵈다가 이렇게 서면으로 소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중, 어느날 갑자기 국가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로하면서도 황당하기 그지 없는 영장을 제시하며 들어 닫힌 국정원에 의해 갇힌 몸이 돼버렸습니다.

조종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과 보수세력, 중간층까지 온 나라가 내란음모 종북 소동으로 이성을 잃고 날뛰고 있을 때 객관적인 진실을 보도하고 진보운동의 전략적 관점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레프트21> 동지들의 글을 접하게 돼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향후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애국적인 시민들의 대중적인 투쟁과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박근혜 정권의 공작 정치가 여실히 드러날 것이라 봅니다.

그동안 현장에 함께했던 노동자연대다함께 동지들의 진정성과 정세에 대한 냉철한 분석, 대처에 박수를 보내며 항상 함께 가고 있다는 연대의 의지를 담아 보냅니다. 9월 말까지 근 한 달간 서신 및 접견에 대한 제한을 걸어 놓아서 언제나 이 글이 전해질지 모르지만 <레프트21>과 노동자연대다함께 동지들의 건승을 바랍니다.

2013. 9. 19. 한가위 아침에 청계실에서 한동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노동자연대다함께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http://workerssolidarity.org)



울산지회
국정원 선거 개입과 마녀사냥 등을 통해 보기—
국가란 무엇이고 어떤 구실을 하는가?

연사 : 차승일(레프트21) 기자
일시 : 10월 17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울산시민연대 교육관
참가비 : 3,000원(학생 2,000원)
문의 : 010-5004-1880

서울 남부지구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
국가란 무엇인가

연사 : 미정(추후 공지)
일시 : 10월 31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미정(추후 공지)
문의 : 010-9401-1370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 중단하라

김현옥 전교조 대의원

곳곳에서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많은 전교조 조합원들은 “동지의 목을 치라”는 정부의 요구에 분노하며 “어떤 탄압이 와도 전교조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부의 법외노조 협박 이후에 “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오히려 전교조에 가입하는 교사들도 생기고 있다.

10월 8일에는 8백여 개 단체가 나서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탄압저지 긴급행동(긴급행동)’을 결성했다. 한국 사회의 주요 시민·사회·노동·종교 단체들이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맞서 힘을 모은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지난 3월에 이어 최근 또다시 박근혜 정부에 “해직조합원 자격 제한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국제노동조합총연맹·국제공공노련은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설립취소 위협에 항의하기 위한 국제 캠페인도 시작했다.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억누르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는 국제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탄의 대상

실제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정부는 교원노조법을 들이밀며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고 말하지만 교원노조법 자체가 전교조의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고 만든 폐지돼야 할 악법이다. 그래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진행중이기도 하다.

또 교원노조법의 일부 조항을 어겼다고 해서 노조 설립을 취소한다는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민변 변호사들은 “노조 설립 취소는 위헌적 조치”라며 규탄하고 있다.

게다가 뉴라이트 경향의 자유교원조합(자교조)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자교조에 대해서는 어떤 위협도 하지 않았다. 정부의 의도가 뻔히 드러나는 것이다.

정부는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전체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려 한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교육 구조조정뿐 아니라 전 사회적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을 뒷받침하고 싶은 것이다.

이번 공격을 단지 해고자 개인들의 문제로 협소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에 이어 건설노조의 노조설립취소를 추진하고 있고, 화물연대 등 공공운수에 대한 공격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탄압에 단호히 맞설 뿐 아니라, 법외노조화를 무릅쓰면서 규약개정을 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전교조 합법화는 정리해고법·파견법 도입과 맞바꾼 비운의 역사를 안고 있다. 그런 전교조가 이번 정부 공격에 굴복한다면 전체 노동자 운동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전교조가 규약 개정을 거부하며 강력히 투쟁할 때,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연대도 힘있게 건설될 수 있다.

규약시정 거부에 투표하자! 지도부는 총력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10월 16~18일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정하는 총투표가 진행된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이 투표에서 단호하게 거부 입장에 투표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원 과반이 규약시정을 거부하면 다행이지만, 반수 이상이 규약시정을 지지하면, 특히 반수 이상 3분의 2 미만이 시정을 지지하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9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는 과반 찬성으로 규약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이는 현행 노동조합법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 16조에는 “규약의



전교조를 약화시키고 전체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려는 공격에 맞서 단호한 투쟁과 광범한 연대를 건설하자. 10월 11일 전교조 탄압저지 집회.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총투표에서 반수 이상 3분의 2 미만이 규약시정을 찬성하면 전교조는 규약을 개악하고도 법외노조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공무원노조의 전철을 밟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 전교조 지도부가 지난 대의원대회 때 이런 혼란을 방조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이런 혼란과 동요를 피하기 위해서도 단호하게 규약시정 거부에 투표

해야 한다.

물론, 총투표에서 거부 입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법외노조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전교조가 총력파업 등 투쟁을 벌이며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최근에도 미국, 영국, 브라질 등에서 보듯이 교사 노동자들의 파업은 무리이거나 불가능한 게 아니다.

이 나라에서도 2006년에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전교조의 연가 투쟁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2006년에도 연가 파업을 했지만 교원평가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가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2006년 노무현 정부의 교원평가 법제화

시도를 막았고 지금까지 법제화는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때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투쟁을 건설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10월 23일 노동부 결정 뒤에야 연가파업 여부를 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노조설립 취소 통보를 한 뒤에 이를 철회시키는 투쟁을 벌이는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다.

따라서 규약시정 거부로 투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시 총력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그러려면 전교조 지도부는 지금부터 그런 입장과 계획을 밝히고 조직해 나가야 한다.

전교조 전 해직자의 목소리

“압도적인 규약 개정 반대로 뜻을 모읍시다”

박수영 전교조 교사

전 일제고사로 해직되면서 조직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일제고사 거부하고 해직되는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막막하더라고요.

하지만 생계에서부터 복직투쟁까지 조직이 책임져 줬기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이것마저 빼앗겠다고 난리네요.

해직자에게 조합원 신분을 박탈해 온전히 개인으로 그 험한 세상에 혼자 나서라는 강요, 참으로 무섭습니다.

규약이 개정돼 해고자는 조직의 일원이 될 수 없다면, 그래서 조직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누가 그 험난한 싸움에 선뜻 나설 수 있을까요?

해고자를 조합에서 고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요?

해고자의 가장 큰 구실은 부당한 해고에 맞서 복직투쟁을 하는 것이지 조합이

고용해 단순 생계 유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우리의 동지들에게 눈칫밥을 먹여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해직 후에 당당히 조합원의 신분으로 2년 연속 지회장을 했습니다. 조직이 지켜 주니 그에 대한 당연한 의무기도 했습니다.

해고자들에게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은 해고 경험자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에 참으로 안

타깝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규약 개정에 응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국민의 지지는 잘못된 현행법을 따르는 데서 얻는 게 아니라 투쟁을 통해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번 총투표에서 압도적인 규약개정 반대로 뜻을 모아 법외노조라는 발상 자체를 깨 버리고 더 당당한 전교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설립 신고 반려 경험을 돌아보며

“후퇴는 더 큰 후퇴를 불러옵니다”

양윤석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2010년 2월 조합원 총투표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조항과 ‘정치적 지위 향상’, ‘강령’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

그럼에도 노조 설립 신고는 반려됐다. 노동부가 내세운 이유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82명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하조직 대표자 중 8명이 업무총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규약을 개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명단과 투표 참여자 명단까지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한 번 후퇴하니 더 큰 후퇴를 요구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2011년 9월 대의원대회

에서 규약을 본래대로 개정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회복시켰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는 올해 정부에게 또다시 농락당했다. 6월경 노동부 장관을 만나고 몇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하면서, 설립 신고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규약을 개정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그러나 설립 신고는 또다시 반려됐다.

노동부는 ‘규약의 단서조항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돌이켜보면 설령 단서조항까지 삭제했더라도 정부는 2010년 때처럼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했을 것이 확실하다.

이런 공무원노조의 경험에서 전교조 동지들도 배웠으면 한다.

정부의 의도는 전교조가 규약을 법에

맞도록 고치면 노조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분명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양보하면 정부도 양보하는 ‘아름다운’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후퇴만 요구할 것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총투표가 “함께 책임을 지며 총력 투쟁을 이어가자는 취지”라고 했는데, 총력투쟁을 위해서라도 총투표에서 규약 개정을 거부해야 한다.